

제429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1월20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1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1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1

(10시06분 개의)

○소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10시07분)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입니다.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안녕하십니까?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들 오세요.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소위 자료 6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권의 3페이지 산업통상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7건, 감·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신규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고성능 GPU 확보 후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으므로 185억 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상임위 감액 의견을 존중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4페이지 2번 친환경차 전환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입니다.

내역사업인 경영안정자금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대출원금 수요가 9월 말 기준 603억 5000만 원으로 당초 목표로 한 대출원금의 24.1%에 불과하고 26년 예산 역시 불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37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상임위 감액 의견을 존중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3번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의 세 번째 줄입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기 위해 35억 7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상임위 감액 의견을 존중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5페이지의 4번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입니다.

앞에 심의하신 부처의 예에 따라 보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아, 부처 의견은 듣고 보류할까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상임위 감액 의견을 존중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유는 짧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감액이 이 정도 된 후에 사업의 필요성에 의한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의 의견이 존중되었으면 하는 게 부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잘 알겠습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6페이지 5번 IPEF 청정경제 촉진펀드 조성(ODA)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공여를 하지 않거나 공여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강제성 없는 공여 계획이므로 25년도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23억 1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상임위 감액 의견을 존중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6번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해외역직구 활성화지원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대한상의를 통한 공동마케팅이 아닌 개별 유통기업의 맞춤형 마케팅이 효율적으로 판단되므로 대한상의 보조금인 공동마케팅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임위는 8억 원 감액의견이고 30억 원 감액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상임위 감액의견 8억 원에 대한 의견을 존중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의 의견 듣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상임위의 의견 받아들이고 추가 논의를 위해 보류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감액.

○**강승규 위원** 아, 이것은 상임위 감액이고 뒤의 제 감액은 철회.

○**소위원장 한병도** 상임위 8억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7페이지의 7번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입니다.

내역사업인 캄보디아 식품가공 TASK 센터 조성에 대해 캄보디아의 한국인 납치사건 협조·공조 미비를 고려해서 7억 6000만 원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이 부분은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본 사업이 총 5년간 23년부터 2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인데 지난 3년 동안 이미 시설 장비가 다 구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2년간 이 구축된 장비를 놀리게 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고 향후 2년 동안에는 활용 교육, 시운전 이런 것을 통해서 향후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 활용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감액 철회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정부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8페이지의 무역보험기금 출연입니다.

내역사업인 대미투자지원 5700억 원에 대해서 먼저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내용이 미비하므로 감액하고 향후 MOU 체결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후 적정 규모를 재논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임위에서는 1000억 원 감액의견이고 5700억 원 전액 감액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 두 번째 줄입니다.

기재부 일반회계에 해당 공사·기금운영에 필요한 출자금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대신 이 사업 예산 57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며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이 부분은 수용합니다. 지금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해당 공사·기금운영에 필요한 그런 출자금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대신 이 사업의 5700억 원 감액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상임위에서 1000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이 됐기 때문에 출자 전환하더라도 상임위 의견 1000억 감액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전체 5700억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해서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앞에 정리된 것처럼 똑같은 원칙에 따라서 보류……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 요청이요?

○강승규 위원 예.

○소위원장 한병도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금융위도 했고 기재위도 했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액, 정부가 이것들을 다 감액하고 새로운 공사를 만들고 특별법을 만들기 때문에 지난 금융위하고 기재위처럼 감액은 의결을 하고 증액은 증액 단위에서 따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고 상임위에서 5700억 중에서 1000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일단 조정이 됐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사의 출연금으로 대신하는 게 있는데 상임위 1000억 감액은 공사 출연하더라도 존중이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보류로 추가 논의를 해 달라는, 똑같은 원칙입니다.

○**김한규 위원** 의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김한규 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강승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마치 이 사업을 하더라도 3개 부처의 합친 예산을 합산하고 그 대신에 산업통상부에서 감액한 1000억은 그 합산 금액에서 감액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에서 그 1000억을 감액할 때 이 사업이 부적절해서 1000억을 감액한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었고 이렇게 기획재정부 일반회계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일정 금액은 감액하자라는 정도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하고 동일하게 그냥 전액 삭감하고 기획재정부 증·감액하고 연계하는 게 맞지 이 1000억 부분을 특별히 취급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승규 위원** 오케이.

○**소위원장 한병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안대로 기획재정부 일반회계에서 해당 공사·기금운영에 필요한 공사출자금예산 증액 편성 대신해서 5700억을 감액하고 증·감액 관련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투자계정) 세출에 감액사업 3건과 감·증액사업 2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유전개발사업 출자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은 경제성이 없다고 판명되었고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따라 109억 22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26년 동 예산은 동해가 아닌 그간 탐사가 부진했던 서해와 남해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시추가 아닌 탐사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서해와 남해는 특히 중국과 일본과의 해양 주권 문제도 관련이 있어서 최소한 시추는 아니더라도 탐사 예산은 배정되어서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했으면 하는 게 정부의 희망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동해의 탐사가 실패했다 그것도 좀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해는 지금 대왕고래가 1차 탐사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지만 주변 시추 탐사에서 메이저 사가 지금 참여하는 등 여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유전개발사업비는 동해가 아닌 남·서해입니다. 남·서해 같은 경우 지금 중국이라든지 또 일본 등이 주변 광구

에서 석유 개발을 하고 있고 실제 연내 물리탐사 시행되는 것도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정부가 편성한 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제가 감액 의견을 냈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서해와 남해 같은 경우는 22년부터 탐사 관련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3D 탐사선을 활용해서 우리 영해에 대한 가스 그리고 석유 부존자원 가능성에 대한 탐사 작업을 해 왔던 사업이고요. 서해 같은 경우는 24년부터 예산이 배정되어서 같은 유형의 사업을 추진해 왔던 그런 항목입니다.

○임미애 위원 이 사업은 제가 추가 자료를 조금 받아본 다음에 보류시켰다가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몇 가지 훑어봤는데 아직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보류시켰다가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알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아까 강승규 위원님 말씀 중에 이게 팩트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다 언론에서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정부의 탐사 작업은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강승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왕고래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해외 입찰을 실시했고, 해외 입찰에 특정 기업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치고 있고 최종 확정은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것도 아니고 전 정부에서 입찰을 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사가 선정된 것도 아니고?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메이저사가 들어와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발언은 정정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이해될 측면이 있는 거예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정 사를 정부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부적절해서 특정 사를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라는 유망사가 들어와서 입찰에 응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진행할 거냐는 거예요. 아까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 부분은 진행되고 있어서 검토가 끝나야 최종 확정될 것 같다는 겁니다. 지금 미리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정확한 상황은 지금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을 위한 절차는 진행 중이지만 지금 그 일대에서 무슨 탐사, 개발 이런 직접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볼게요.

서해에 탐사가 들어가는 구역이 어느 구역인가요? 지금 중국의 서해 불법구조물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쪽 구역과, 한중 잠정수역 이쪽인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거기와의 인근해 있기는 합시다라는 잠정수역이 아니라 우리 쪽 수역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우리 구역에 해야지 남의 구역에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 제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아니요, 이것은 이훈기 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 저한테 의견을 전달해 주셔서 제가 그 말씀은 대신 전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일단은 오타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69페이지 보면 끝에서 세 번째 줄에 ‘사업 생산성이 없을 것’이라고 질의서가 들어가 있는데 ‘있을 것’이라고…… 이게 오기인 것 같고요.

○임미애 위원 ‘있을 것’으로 돼 있어요.

○소위원장 한병도 ‘생산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생산성이 없을 것이라고 봐서 감액 의견을 낸 것……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오타입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 질의서의 취지는 지금 당장 탐사를 해서 유전을 발견하더라도 사업기간이 30년, 40년 정도 되는 사업인데…… 국제에너지기구가 여러 차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30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의 가스 수요는 굉장히 많이 하락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전을 탐사해서 발굴하고 그 이후에 30년, 40년, 50년 사업기간을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좌초자산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임미애 위원님이 철회하셨더라도 이 부분은 좀 보류하고 논의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유전개발사업 출자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70페이지입니다.

2번 에너지바우처와 3번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은 유사한 지적 내용이므로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번 에너지바우처 내역사업인 연탄쿠폰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연탄쿠폰 등 탄소집약적 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에너지 효율성이 낮아 예산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냉난방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감액 후 사업내용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3번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LPG 등 공급체계 구축은 탄소를 과다 배출시키므로 마이크로그리드·히트펌프 등을 설치·보급할 수 있도록 감액 후 사업내용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두 가지 사업 모두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관련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부와 산업부가 양 부처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우선 에너지바우처 중에서 연탄쿠폰과 관련해서는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내년 예산에서 한꺼번에 없애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그중에 연차적으로 4년간 1만 가구씩을 대상으로, 현재 연탄쿠폰이 4만 가구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4년간 연차적으로 해서 1만 가구씩을 대상으로 연탄쿠폰이 아닌 에너지바우처로 기후부 쪽에서 이 부분을 담당해 주는 걸로 양 부처 간에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6년에는 1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거기의 해당 금액 55.1억 원을 감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연탄보일러의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취약계층의 부담이 증가될 것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부처가 긴밀히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시키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에너지바우처의 연탄 부분을 완전 전액 삭감해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하겠다라는 그것도 지금 정부에서 동의를 하시고 계신데 이 정부가 신재생 만능주의에 빠진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은 파악하지 못한 채. 실제 연탄 등의 바우처가, 연탄쿠폰이 필요한 부분은 저소득층이 대부분이고 이 저소득층에 예를 들면 달동네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연탄바우처를 대체하겠다는 건지 참으로 알 수가 없고요. 이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삭감에 전면 반대를 하고요.

두 번째 LPG공급체계, LPG에 대해서도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소위원장 한병도 지금은 첫 건만……

○강승규 위원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없앤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아까 말씀 중에 55.1억을 바우처 형식으로 해서 다른 에너지로 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협의가 됐다는 건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우선 부처 간 별도 예산이니깐요. 저희 부처 예산에는 감액하는 것에 동의하고 그리고 1만 가구에 해당하는 것은 기후부 쪽의 예산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바우처로 대체하는 걸로 기후부하고 협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이걸 감액 의견을 낸 것은, 저도 농촌 지역에 살지만 여전히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꾸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실제로 지금 저소득층이 사용하고 있는 난방 시스템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전면적인 교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당장 급하다고 해서 계속 지원만 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NDC 로드맵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집행된 게 과연 적정한가. 여전히 연말 되면 연탄을 공급하는 사업들이 여러 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류로 돌리고 조금 더 에너지바우처의 폭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후부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소영 간사님.

○이소영 위원 이게 지금 산업부랑 기후에너지부가 부처 개편이 되면서 사실은 여러

예산 부분에서의 편성에 불일치가 나오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기후부에서는 전기나 열을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전기에 대한 보조라거나 다른 여러 가지 보조사업들을 에너지바우처라고 해서, 그게 아마 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삭감되지 않은 채로 이번에 예산안이 올라온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안 제출 후에 부처 개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연탄이든, 연탄으로 공급하는 열이든 전기로 공급하는 열이든 에너지는 하나의 부처에서 원래 관리가 되고 있었던 건데 자원은 산업부에 남으면서 일차에너지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 산업부에 남고 전기나 열에 대한 정책은 기후부로 넘어오면서 전기·열을 공급하는 걸 기후부에서 50억을 가지고 있는데 산업부에도 그 50억이 포함되어 있는 그대로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올라온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부처 개편으로 인한 약간의 중복성을 해소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소득층분들 입장에서 난방열 공급이 안 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게 줄어들면 당연히 안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연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산화탄소 중독의 우려도 있고 지금 2025년 오늘날에도 연탄가스 중독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저소득층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최악의 연료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에는 난방열을 공급할 수 있는 다른, 예컨대 히트펌프라거나 다양한 전기제품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스중독의 우려가 없는 조금 더 깨끗하고 건전한 에너지로 이걸 지원하는 사업을 기후부가 50억가량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일부 그런 게 전환이 가능한 가구에 있어서만, 일부 한 50억 정도에 해당하는 가구에 있어서는 일단 그걸 일차적으로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수혜 대상 가구는 동일하고요. 그래서 오해하시는 것처럼 이게 저소득층한테 가는 에너지 복지가 줄어든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임미애 위원님이 보류 의견 주셨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조정훈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일단 보류했으니까 보류하시고요. 현실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분들이 소위 주거 약자분들이신데 연탄보일러를 떼고 싶어서 때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월세든 자가든 사는 곳이 연탄보일러를 사용하기 때문인데 저는 이분들이 더 깨끗한 에너지로 난방을 하게 되는 것 동의하는데 그러려면 1인당 지원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시설·장비…… 똑같은 돈을 주고 연탄 대신 재생에너지를 써라? 이건 비현실이잖아요. 시설·장비들을 우리가 다 해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일단 이분들을 따뜻하게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류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3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탄소를 과다 배출시키므로 마이크로그리드 등 설치·보급할 수 있도록 감액 후 사업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서 했던 사업과 비슷하게 산업부하고 기후부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는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전체 감액이 아니라 기후부하고 협의한 결과 이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 중에서 현재 기후부에 들어가 있는 태양광·히트펌프 지원 사업 64억 원으로 해 줄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20% 정도인 걸로 양 부처 간에 서로 논의를 해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중에서 20%인 4억 4700만 원을 감액하는데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먼저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먼저 항목에 이어서 다시 한번 제가 비판합니다. 위원님들 토론에서 다른 이유 등을 냈지만 2번 항목에서도 분명히 연탄쿠폰 등에 대한 감액 요청을 하면서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냉난방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감액해야 된다’ 얘기했고 지금도 ‘에너지복지 또는 저장탱크 등에 대해서 탄소를 과다 배출시키므로’라는 이유 등으로 LPG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감액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정부도 지금 일부 감액에 동의하면서 태양광·히트펌프로 전환할 수 있는 게 한 20%가량 된다고 할 때 이렇게 감액합니다. 그런데 지금 태양광·히트펌프든 또 다른 태양열, 재생에너지 등 이런 부분들이 우리 현지 사정에, 이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모든 곳에서 그런 부분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LPG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에서는, 저희 지역도 말하는 바가 똑같은데 지역에서는 도시가스를 보급해 달라는 민원이 쇄도합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라는 것이 관로를 공급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이나 산간지역들은 주택이 산지에 있어서 도시가스 보급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비용이 자가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LPG를 쓰면, LPG 가스통을 쓰면 도시가스보다도 배달료 등을 다 할 때 3배, 4배, 5배까지 비쌉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굉장히 주민들이 원하는데 그 대안으로 LPG 저장탱크를 마을마다 보급해서 몇 가구들이 같이 공유를 하면 배달료라든지 여러 가지 LPG의 공급 가격이 줄어든다고 하면서 이 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소위 에너지 보급에 있어서 레벨이 낮은 단계, 농촌, 산촌, 어촌 등의 저소득 지역에 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이념적으로 태양광·히트펌프를 확대하고, 그래서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을 확 줄이겠다 이런 부분 등이 현장을 도외시키고 그리고 비용이나 경제성이나 이런 것 등을 도외시하는 정책에 대해서 감액에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강승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불가피하게 LPG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농산어촌의 경우 LPG 저장탱크를 설치해서 비용을 낮추고 그것을 통해서 열에너지를 공급받게 하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새롭게 시설 구축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LPG라는 연료가 지속 가능한 연료인가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저는 우리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요즘 농촌에서 새롭게 이야기되고 있는 건 어제 저희 기후에너지부 사업 예산 점검하는 중에도 나왔는데요 마을 단위별로 에너지 자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지금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동으로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자립하겠다고 하는 마을들도 나옵니다.

저는 이 예산이 전액 감액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원, 지금은 조금 다소의 비용이 들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이 높은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하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감액 의견을 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아까와 같은 논리로 기후에너지부와 함께 논의해서 다른 연료로, 다른 재생에너지로 확대할 수 있는 폭이 있다면 그렇게 집행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에서 보류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 한말씀만 드리면 안 될까요?

○소위원장 한병도 예.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불을 켜거나 전동기를 돌리는 건 전기로 하고 난방을 하거나 취사를 하는 것은 열로 했는데 열을 공급하는 것은 LNG, LPG 이게 오래된 고정관념인데요. 이미 선진국은 전기와 열을 다 하나의 소스로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태양광이나 태양열로 전기·열을 같이 공급하는 히트펌프 같은 전자제품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제품들이 유럽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도 이제 선진국처럼 이것을 다변화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정리하게……

○소위원장 한병도 예.

○송기현 위원 차관님, 이게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자르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설비를 설치할 때 그것을 LNG 중심으로 하는 것 말고 장기로 지속 가능한 다른 시설로 하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기존 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건 분명하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71페이지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설계 착수 지

연으로 25년도 공사비가 전액 이월될 것으로 보이므로 26년도 사업비 690억 71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상임위 감액의견을 존중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상임위에서 정리가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론 부분 차원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사실 과거에 광해광업공단이 해외자원 실패로 인해서 지금 현재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부장 산업과 관련돼서 희토류 등의 특정 광물에 대한 특정 국가 의존도가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산업의 안정성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부분에 오히려 힘을 실어 주고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손발을 묶어 놓는 그런 정책 방향은 저는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류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하고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72페이지 5번 탄가안정대책 보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칸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연탄난방 가구 수가 전 가구 수의 0.3%에 불과하고 저소득층의 연탄난방을 고효율 냉난방기로 교체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이므로 32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11억 75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석탄가격안정지원 차액보전금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 기조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56억 4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연탄 보조금과 석탄 보조금 두 가지 사안입니다. 두 가지 사안 다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유는 우선 연탄 보조금은 연탄공장에 주어지는 보조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삭감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25년 8월에 지금 당장 전체가 아닌 연차적인 삭감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의견이 모아졌고 그래서 연탄 보조금은 향후 26년, 27년까지만 보조가 되고 이후에 삭제되는 것으로 정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연탄 보조금이 정부 원안대로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다음 석탄 보조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그거 하고 할게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석탄 보조금은 탄광에 지급되는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이 무연탄발전소가 동해화력발전소로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30년 폐지되게 되어 있고 이 무연탄발전소의 마지막 발전소에 공급하기 위한 마지막 탄광이 삼척 상덕광업소라고 하는 경동탄광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것이고 이 탄광이 29년 말에 폐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 석탄 보조금이 29년까지만 지원되는 걸로 정부에서 안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석탄 보조금도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임미애 위원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정부 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 건은 제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임미애 위원님이 철회하셨으니까 첫 번째 건 됐고요.

두 번째 것도 석탄 가격이, 일단 상덕광업소 경동탄광이 지금 아마 마지막 폐업을 준비 중이고 또 무연탄 동해화력발전소도 30년에 끝나는데 그 전까지는 이 발전의 또 경동탄광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의 기존 수입 석탄 가격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탄광 개발, 무연탄 채굴 그리고 마지막 남은 동해화력발전소 무연탄 운영 등에 있어서 보조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질문인데요. 이게 전년도 대비 예산이 56억 증액됐고 그래서 석탄 보조금 단가를 높이는 것 자체가 이 기조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의로 제가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되돌리자라고 하는 감액 의견인데, 이게 1년 만에 56억이 증액되는 이유는 뭔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저희들이 추산했을 때 결국 생산원가가 증가해서 그런 거고 생산원가가 증가했던 것의 가장 큰 부분이 유지비 부분하고 인건비의 상승 부분 쪽이 포함해서 계상했을 때 56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던 부분입니다.

○**강승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금……

○**소위원장 한병도** 잠깐, 말씀 끝나면 위원님 다시 기회 드릴게요. 말씀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래서 정부 측 설명대로, 이 부분은 계획을 앞당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 탄광에 대한 여러 가지 정리 수준에 있어서 필요한 보조금이라고 한다면 원안 유지에 동의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철회?

○**송기현 위원** 철회가 아니고?

○**이소영 위원** 그런데 질의자가 지금 현장에 없으니까 철회는 어려운데 제가……

○**송기현 위원** 소위 결정으로 원안.

○**이소영 위원** 예, 소위 결정으로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이 56억이 발전업자 동해화력발전소에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동탄광에 지원하는 거예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경동탄광에 지원하는 겁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경동탄광에 지원하면 아까 차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인건비 등의 비용 상승도 있지만 저희들이 들은 바로는 무연탄 수입 단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고 경동탄광에서는 조금씩 비용은 늘어나지만 어떤 생산비가 들어가는데 수입 단가와 생산 단가의 차액을 보전하는 측면에서 볼 때 수입 단가가 내려가는 것이 더 원인이다 하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저도 잠깐만……

○**소위원장 한병도**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제가 산중위에 있는데 어제 산중위 법안소위에서 ‘광업인의 날’ 지정하고 ‘광부의 날’ 지정이 다 통과가 됐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위원들은 다 의미가 있다, 광업인과 광부가 다르다라는 이 철규 의원의 발의 때문에 통과를 했는데 그 취지가 이제 어차피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기리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승규 위원님이 어제 다른 질의 할 때 얘기하신 것처럼 오히려 젊은 직원들은 조기 퇴사, 그러니까……

○**강승규 위원** 조기 폐광.

○**김한규 위원** 조기 폐광의 긍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의 대체 일자리 마련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을 한다고 하면 굳이 2029년도까지 경동탄광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없는 분위기라고 저는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우리 산중위에서 현장 국감을 통해서 그런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2029년까지 그냥 매년 이렇게 논의하지 마시고 내년 중으로 한번 조기 폐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산업부가 해당 사업장과 근로자들과 논의하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의견이 있으신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지금 당장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추가적인 논의와 그걸 기반으로 한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대의견을 위해서 근거를 마련해야 되니까……

○**조정훈 위원** 부대의견에 담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방금 김한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제가 정리하지요.

그것 부대의견에 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는 정부안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러면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전부 정부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용자계정) 세출, 감·증액 사업이 1건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 특별용자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최근 10여 년간 용자승인을 받은 사업 대부분이 유전 사업에 집중되었는데 화석연료에 대한 신규투자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710억 17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289억 8300만 원과 1000억 원 증액 필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감액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감액 규모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해당 예산 중에는 크게 두 부류로 하나는 석유가스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핵심 광물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취지의 연속선상에서 석유가스 부분 쪽 예산의 감액을 일정 부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민간기업에 용자를 해 주는 부분이어서 시장의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당장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체 금액이 아닌 석유가스 부분의 10% 정도에 해당 하는 35억 원의 감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잠시만요.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조정훈 간사님.

○조정훈 위원 조금 헛갈리네요.

차관님이시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조정훈 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안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는 289억 증액 필요를 의결하셨어요. 그때 반대하셨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때는 찬성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그때는 289억 증액을 찬성하고 지금은 35억 감액을 찬성하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죄송합니다.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서 예결위 지적사항이 그 후에 저희들……

○조정훈 위원 아니, 그것 며칠이나 됐다고 추가적 지적사항을 해서 289억·35억, 거의 300억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부처가 얼마나 허술하면, 얼마나 생각 없이 움직이면 이런 일을 합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35억 감액을……

○조정훈 위원 이것은 상임위 위원님들 전원에 대한 모욕이에요. 만장일치로 전원 합의 해서 의결한 것을 또 삭감하는 것을 동의해 주시고, 생각에 좀 신중하십시오.

○소위원장 한병도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저도 이게 조금 헛갈리는데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액 삭감의 견을 냈는데 상임위에서는 증액의견을 냈어요. 그리고 저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삭감 규모와 관련해서는 지금 나온 의견으로는 여기서 결론짓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류해서 삭감 규모를 정하든가 상임위 의견대로 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강승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 존경하는 조정훈 간사대행께서 지적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제가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동의해 놓고 예결위 소위에 와서 차관께서 의견을 뒤집은 것은 여야 상임위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줄기차게 입장을 내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이재관 위원님도 얘기했고 어제 최형두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자원개발, 그게 탄소에너지든 아니면 희토류든 희소광물이든 자원개발에 대해서는 국가가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시기에 자원개발이 실패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씨를 말리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검토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재관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두 번째, 이 탄소에너지 등에 대해서 지금 세계가 재생에너지 또 탈탄소를 해야 된다는 큰 원칙은 맞지만 그것을 급격히 앞당겼던 선진국가들에서 지금 많은 부작용 특히 첨단산업·AI 등이 있다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은, 적절한 에너지믹스 필요하다는 건 다시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해외 자원개발에 대해서 우리도 끊임없이 꾸준히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증액을 요구했고.

일본 같은 경우 해외 유전탐사나 개발을 통해서 지금 자급률이 60%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그게 어떤 기업이나, 물론 시대적 요구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자원개발의 대상은 좀 바뀔 수 있지만 자원개발에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산자부가 이런 것을 방기하면 그것을 누가 지켜 줄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노종면 위원님.

○노종면 위원 상임위에서 의결한 내용 중에서 예결위 심사를 하다 보니 크게 이견이 발견되지 않은 것도 여러 건 부결시켰어요. 보류시켰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의결을 했을지라도 예결위를 두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중·삼중의 심의를 하자는 건데 예결위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그것에 따라서 정부가 입장을 바꿨는데 그것을 상임위를 모욕하는 거라고 하시면 좀 과하지 않은가.

만약에 반대로 예결위에서 지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이 안 바뀌면 예결위를 통째로 다 모욕한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당연히 정부 입장은 국회의 의견을 듣고 재조정 가능해야 그게 행정부와 입법부와의 관계라고 저는 봅니다.

좀 더 근본적인 것 좀 여쭙볼게요.

이 해외자원개발 예산이 어떤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 융자해 주는 거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민간이 하는 사업의 비중이 화석연료 개발, 유전개발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아마 이 자리에서 아무 이견이 안 나올 만한 그런 희토류 개발사업하고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지금 현재까지는, 과거에는 거의 100% 석유가스가 됐고 올해가 한 8 대 2 정도로, 광물 쪽이 한 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것을 점진적으로 계속 개선할 그런 방향성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다만 남은 것은 그 방향성에 따른 실행계획의 속도가 적정한가, 아까 한 35억 정도는 삭감에 동의한다고 하셨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 여지가 있으면, 아무튼 어차피 이것 보류가 될 텐데 보류 과정에서 회토류 등 앞으로 좀 더 개발 여지가 크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지는 부분과 기존 유전개발류 그것의 비중 조절을 감안해서 감액 수준을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이것 정리하겠습니다.

해외자원개발 특별용자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항에는요 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하면서 중복되고 이런 건 좀 제한을 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소부장특별회계 세출, 감액 사업이 1건 있습니다.

1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지원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회의수당 예산을 4500만 원 편성했는데 매년 집행액이 2000만 원 이하이므로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상임위 감액 의견을 존중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출, 감·증액 사업이 1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마지막 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환경조성입니다.

내역사업인 RE100산단 구축지원 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기존 노후 산단과 입주기업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비 중 52억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고 261억 원, 69억 원,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상임위 감액 의견을 존중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의견 없습니까?

○**이소영 위원** 아니, 그런데……

○**송기현 위원** 잠깐만.

○**소위원장 한병도** 잠시만요.

이소영 간사님.

○이소영 위원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소위원장 한병도 예.

○이소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같은 사업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 10개가 넘게 붙어 있는데 그것은 여야 위원님들 다양하게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류하고 이 말씀을 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기현 위원 감액을 하시면 증액을 다 안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감액만 딱 확정되기 때문에 소위에서.

○소위원장 한병도 잘 알겠습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 같습니다. 이것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 소관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통상부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노동부차관 권창준입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들 오세요.

앉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소위 자료가 이제 7권입니다.

소위 자료 7권의 143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증액 사업이 3건 있습니다.

먼저 1번 근로감독 역량강화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근로감독제도 혁신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300명의 지방 근로감독관에 대한 교육을 위해 교육용역비 92억 1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추진 일정을 고려해서 16억 2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없습니까?

감액하도록……

○조정훈 위원 임미애 위원은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요청한……

○소위원장 한병도 감액해도 되는 건가요? 임미애 위원님.

○조정훈 위원 임미애 위원님,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요청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것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아, 그런가. 이거 감액해도 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소위원장 한병도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45페이지 2번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입니다.

첫 번째 칸의 내역사업인 근로감독제도 혁신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교육비는 지방자치단체 산업안전감독관 권한 위임의 근거 법률 개정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12억 7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감액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잠깐만.

○소위원장 한병도 조정훈 간사님.

○조정훈 위원 정리만 할게요. 1번 사업 근로감독 역량강화에도 내역사업에 근로감독제도 혁신이 있고 2번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에도 내역사업에 근로감독제도 혁신이 있어요. 내역사업이 이렇게 흩어져도 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위원님,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산업안전감독관하고 그다음에 일반근로감독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그렇게 내역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사업 이름을 변경하셔서 혼돈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6년도의 사업개편은 단순히 근무지 소재를 기준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역차별이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307억 7800만 원 감액 의견과 일부 감액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도권 지역 간 일자리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에 우대해서 지방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차관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이것 저도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요. 저도 지역구가 부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히 사상공단이 끼어 있어서.

그러나 고용부가 청년 근속 인센티브를 비수도권 청년에게만 지급하도록 변경한 이 자체에 있잖아요, 이것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면 청년을 구분해서 지원 여부를 달리 하는 방식, 예를 들어서 청년기본법이 있잖아요. 제3조 차별금지원칙 여기에 반할 수 있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 수도권의 청년들 5만 5000명은 동일하게 근속해도 지원액이 제로 아납니까? 제로인데, 이런 구조로 같은 청년층 간 역차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정책 형평성을 잃어버린 설계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의 영세·중소기업 이게 지금 구인난이 꼭 수도권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아니고, 지금 여기도 사실은 심각하거든요. 이런 청년 지원을 제외하면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겠다 이런 본래 취지하고도 굉장히 충돌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 이야기하면, 인센티브 방식 있잖아요. 청년 이동 유도정책 이거는 과거 사례를 보면 효과가 거의 없었던 말이지요, 제가 이거를 굉장히 심도 있게 봤는데.

그다음에 청년의 취업 결정 요인, 임금, 직무, 정주환경 이게 인센티브로 실질적인 유인 기능이 불가능합니다. 저도 대학에 있을 때도 한번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상당히 미비하다. 그래서 저는 일관된 지원 구조 이거는 조금 재설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차관님,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이야기한 걸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위원님 말씀 주신 형평성 차원은 저희가 다양한 다른 법들에 의해서 지역균형발전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정책적인 우대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수도권에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에 인력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라든지 다른 정책적인 톨로 뒷받침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수도권에, 잘 아시지만 지금 보면 일자리하고 임금 기회가 전부 수도권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데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저희가 일정한 근속의 인센티브를 주면 청년들도 지방에 정주하면서 수도권으로 유입되지 않고 할 수 있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 지역균형이나 그다음에 수도권 이외의 지방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업임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720만 원을 주겠다는 거 아납니까? 일인당 720만 원.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맞습니다, 2년간 최대.

○김대식 위원 2년간 720만 원 줘 가지고 효과 없어요.

○김한규 위원 증액, 증액 의견.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별로 효과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김한규 위원 720으로도 효과 없다, 증액 의견.

○**김대식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 좀 하고.

제도적으로 이거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현장에서 그걸 해 봤잖아요, 해 보고. 고용노동부에서는 탁상공론일 수도 있지만 저는 필드에 가서 직접 해 봤다니까. 그게 효과가 별로 없어서 이거를 전면적으로 한번 재설계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래서 저는 이 1307억 7800만 원을 일단 감액하고 재설계하는 데 동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설계하는 데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감액도 동의하고 재설계도 동의하고. 서로 나눠야지 설계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김대식 위원** 일단 감액을 해 놓고 재설계를 해서 그때 타당하면 증액을 하든 이렇게 하겠다 이거지.

○**조계원 위원** 그러면 보류 의견이지.

○**이재관 위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정부에서 국가 불균형 문제를 시정을 하면서, 균형발전에 대해서 모든 정부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수도권의 그런 집중도는 현재 오히려 더 가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균형발전 시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의 어떤 정책으로 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묘안은 아직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아동수당의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 청년 일자리에 대한 차등 문제도 그렇고, 맞습니다. 하나의 어떤 정책으로, 720만 원을 쥐서 그 효과가 이 하나의 정책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책들이 수도권의 이 균형발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한다고 그러면 이러한 정책들이 같이 그러한 정책으로 설계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저는 아동수당 문제라든지 청년 일자리 문제도 이렇게 서로 보조를 해 나가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것은 정부 원안 유지의 전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송기현 위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차관님, 아마 지역에 따라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대도시 권역하고 원주 같은 중소도시, 농촌하고 결합된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차이가 많은데 차관님께서 그동안 지역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지원했던 것의 효과, 만족도 이런 것을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원주 시내권이 있고 원주 바깥에 공단 지역이 있어서 원주에서 출퇴근하는 청년들한테 월 10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월 10만 원씩 교통비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게 안 되면 청년들이, 아이들이 일자리에 못 가는 거예요. 일자리에 못 가게 되니까 공장에서 직원을 못

구하는 거지요. 직원을 못 구하면 결국 누가 하나?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는 거야. 이렇게 악순환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1년에 720만 원이면 한 달에 6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60만 원이면 시골 지역, 원주 같은 경우는 한 달에 60만 원짜리 원룸 별로 없어요. 다 그것보다 싸요. 그렇지요? 나는 원주 지역 같은 데에…… 원주는 그나마 강원도에서 좋은 지역인데도 원주 지역의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의 가장 고민이 뭐냐 하면 젊은 애들 뽑아 가지고 일을 시켜 가지고 배울 만하면 1년 있다가 다른 데, 수도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사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이런 정책이 중첩돼서 되지 않으면 결국은 지방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인프라가 다 수도권에 몰려 있고 대도시에도 몰려 있잖아요. 인프라가 되어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하고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오히려 여기에 대한 차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월 평균 임금격차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저희가 종합적인 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격차를 완화해 나가는 게 전체적으로 청년들 일자리의 질,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송기현 위원** 그리고 만족도 같은 것을 조사를 해서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나 다음 연도 예산을 할 때 그걸 좀 제시를 해 주시고, 실제 효과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면밀히 해서 저희가 효과를 뽑아 보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어쨌든 반대가 있고 그러니까 보류하시는 건데……

○**김대식 위원** 시간이 없어서 더 추가 안 되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예,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도 개인적으로 원안이 유지됐으면 하는데 여러 이견이 있으니까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이어서 170페이지입니다.

170페이지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 감·중액 사업 1건 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운영 지원입니다.

내내역사업인 피지컬 AI 공장교육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에 대해 4개소를 지원할 예정인데 개소별 단가를 30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감액 조정하기 위해 2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감액에 대해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72페이지입니다.

고용보험기금(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 지출, 감액 사업 1건과 감·증액 사업 1건이 있습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입니다.

내내역사업인 AI 특화 공동훈련센터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없고 신규 사업인 점과 사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임위는 30억 원 감액을 그리고 150억 원 전액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에 따라서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차관님, 이게 센터 숫자 늘리기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센터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김대식 위원 AI 인재 시대, 이것 AI를 붙여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몇 개를 운영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저희가 지금 65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65개를 지금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타당성이 없어. 찾아보려고 해도 전혀 없는데 신규로 30개소를 더 만든다? 이것은 좀 중복투자 아니에요?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굉장히 해치는 구조로 설계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위원님, 이것은 중소기업하고 정부가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최근에 사업계획도 최종 마무리해서 계속 보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보면 기존 사업들은, 기존 훈련센터에서 하는 것 보면 대개 리터러시 위주라든지 8~12시간 정도 단시간 위주여서 중소기업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진짜 중소기업들이 AI 전환을 하는 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도 그런 취지들을 위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셔서 사업 초기니까 일부 감액을 하되 한번 사업을 잘해 보도록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대식 위원 전국에 노동부에서 하는 폴리텍대학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김대식 위원 폴리텍대학 거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활용할 필요가 있고, 어차피 이게 지금 조직 확대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꼭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해야 되느냐. 있는 것을 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제가 볼 때 앞으로 전면적으로 폴리텍대학도 구조조정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지도자라는 게 뭐겠어요? 미래를 보는 혜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나는 노동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폴리텍대학과—어차피 노동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으니까—65개 공동훈련센터 이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응용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계속 조직 확대하고 늘리고 이래 가지고 지금……

아니, 돈 있으면 해야지요. 당연히 하고 나중에 그것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부분은 나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 주장이 틀린 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받아들이는데요. 다만 위원님, 저희가 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이라는 게 폴리텍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이나 사업자 단체를 통해서 합니다.

○**김대식 위원** 물론이지. 그것은 아는데 지금 폴리텍대학이 전부 전체가 국비잖아요? 사립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소위원장 한병도**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 그래서 상임위안, 예결위안 중에 어느……

○**김대식 위원** 저는 150억 전액 삭감 타당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조정훈 위원** 예, 없습니다. 보류입니다.

○**임미애 위원** 보류하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73페이지 2번 고용안정장려금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위라벨 플러스 4.5 프로젝트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편성되어 사업 추진설계가 모호하므로 276억 47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저희가 말씀 주신 것 중에 예타 관련해서 위라벨 일자리 장려금에 있는 사업을 개편한 거여서 예타 대상이라고 보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희가 중기중앙회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 얘기를 들어서 사업을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말씀……

○**소위원장 한병도**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제가 고용부에 자꾸 하니까 죄송한데……

차관님, 이것은 하나의 정책적으로 하니까……

위라벨 4.5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게 정책 실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반대하시지요? 그것은 동의하지 못하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실험이라기보다 저희가 이런 것을 촉진해 주는 제도의 마중물이 되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김대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고용보험기금에서 예산을 끌어다 쓰는 방식이잖아

요. 이렇게 설계가 돼 있잖아요. 절차, 내용, 효과 측면에서 모두 이게 적절치가 않고 특히 노사 합의요건, 대기업 노조가 있는 기업에만 적용되는 사실상 선택적 정책 아니에요? 그래서 고용보험기금의 형평성과 공정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위원님, 저희가 원래 이 사업을 설계할 때 300인 미만 사업장을 우선으로 선정을 했고, 다만 저희 환노위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생명, 안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큰 기업도 지원해서 하는 게 좋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큰 규모지만 지원을 통해서 교대제를 개편하고 조금 더, 간호 인력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효율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대의견을 그렇게 해서 사업도 그런 식으로 좀 더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김대식 위원** 저는요 나중에 더 논의를 하겠지만 6개월 체험형 프로젝트에 고용보험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서 이 내역은 전액 삭감이 타당하다는 입장이고 하여튼 보류해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조정훈 간사님.

○**조정훈 위원** 참 고민이 있는데요. 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주 4일제를 정치인으로서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 4일제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제적인 주 4일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서 조금 일하고 푹푹하게 일해서 진짜로 쉬는 시간, 휴식의 시간도 충분히 확보하자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독일보다 30일씩 더 일하는 한국 문화가 저는 더 이상 자랑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 4일제를 또는 주 4.5일제, 하이브리드겠지요. 토요일 날 ‘놀토’를 거쳐서 주 5일제로 온 것처럼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이것을 꼼꼼히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 실험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 실험의 목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인, 30인, 300인 이하 작업장에서 실험 이후에 정부 보조금 없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주 4.5일제를 유지하는 기업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보조금 주지 않으면 멈추는 것은 제대로 된 제도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게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일단 6개월 싸우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것은 정책 실험의 올바른 설계가 아닌 것은 차관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보류해 놓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제안을 드릴게요. 저 이것 다 설계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을 설득을 하려면 실험의 전과 후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전 세계에서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아마 제가 가장 많이 콘퍼런스하고 세미나 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좀 보류해 놓고 제가 예산이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면서 소소위 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 제안합니다.

○**조계원 위원** 그래도 조금 발언 한번……

○**소위원장 한병도** 짧게 부탁드립니다.

○**조계원 위원** 이게 지금 대기업 등 여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려는 목적이 아

니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소규모 사업장이나 교대제, 장시간 노동 업종 등에서 노동시간의 단축이 필요하나 여력이 부족한 취약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이 사업 설계도 기본적으로 중소·영세 소상공인과 협의 없이 설계·편성된 게 아니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현장 의견, 이런 수요들을 확인하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소상공인연합회도 논의에 함께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일단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저희가 실근로시간 단축 추진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같이 참여해서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조계원 위원 같이 논의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조계원 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런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돼야지 전체적으로 확산도 할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오히려 저는 1년 정도 해도 될 것 같은데 6개월만 하겠다고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고용안정장려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은 1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임금채권보장기금 지출에 감·증액 사업이 1건 있습니다.

대지급금 지급입니다.

내역사업인 채권관리비용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라 채권관리비용 감소가 예상되므로 4억 4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감액에 대해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근로복지진흥기금(중소복지계정) 지출에 감액 사업이 1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용자)입니다.

내역사업인 생활안정자금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26년도 이차보전금은 최대 9억 570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액을 제외한 차액 16억 3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감액에 대해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마지막으로 196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부, 기타 특이사항이 2건 있습니다.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일반회계의 건설근로자 고용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전망 사업에 대해 예산 2억 원을 일반용역비로 편성했는데 일반연구비 비목으로 편성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목을 일반연구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고용보험기금 고용안정장려금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워라벨 플러스 4.5 프로젝트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기타보전금 비목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나 사업비가 전액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되었으므로 민간위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25억 원을 제외한 251억 4700만 원을 기타보전금 비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노동부와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노동부 말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비목 변경에 대해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기재부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사업 방식의 실질에 맞춰서 비목을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비목 변경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비목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2차관 김대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정훈 기조실장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들 오세요.

수석전문위원 보고 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소위 자료 8권의 3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감액 사업 4건, 감·중액 사업 12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국가기간통신사 지원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5년 예산 대비 증액분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 근거가 미흡하므로 2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사업은 상임위 20억 원 감액안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2번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건비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한 해 채용 규모를 고려했을 때 17명의 교원은 사실상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인건비 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건비 사업은 상임위 5억 원 감액안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하나만 질문……

○소위원장 한병도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17명을 계획했으면, 17명을 왜 못 뽑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한국예술종합학교는 특성상……

○김대식 위원 특수성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특성상 세계 수준의 교수님들을 뽑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는 못 뽑고 있다가 귀국하거나 나가서 섭외하거나 그렇게 해서 뽑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3번 정책홍보 및 분석 지원입니다.

내내역사업인 홍보전문교육에 대해 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홍보전문교육 사업은 상임위의 4억 원 감액안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4페이지 4번 청와대 복합문화 상징공간 조성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사용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는바 인건비와 사랑채 관리 항목을 제외한 예산 103억 4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청와대 국민화합 상징공간 조성 사업은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로 개방을 전제로 한 사업비 103억 4400만 원에 대한 상임위 감액안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5번 국제방송 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국제방송 활성화 사업에 대해 코리아넷 민간위탁 미추진으로 공무원의 전적이 불필요해졌으므로 인건비 증액분 8억 7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고 해당 금액을 27페이지의 국가이미지 홍보 사업에서 증액했습니다. 증·감액 연계사업이므로 문체부와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국제방송 활성화 사업 내 코리아넷 공무원 인건비 8억 7400만 원을 삭감하는 상임위안을 수용합니다.

다만 국가이미지 홍보 사업에 8억 7400만 원을 증액하는 상임위 조정안 반영이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기재부 의견 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실질에 맞춘 증감 연계 내역이므로 증감 연계 조정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조정훈 위원 국제방송이 아리랑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6번 미디어 홍보입니다.

내역사업인 해외 SNS·뉴미디어 여론 분석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 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선거 등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어 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해외 SNS 및 뉴미디어 여론 분석체계 구축 사업은 상임위 5억 원 감액안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8페이지의 7번 매체활용 정책홍보입니다.

내역사업인 매체활용 정책홍보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관련선거 등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매체활용 정책홍보 사업은 상임위의 5억 원 감액안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없습니까?

○강승규 위원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냥 원안 유지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상임위안을 수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8번 미술진흥기반 구축입니다.

내내역사업인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개관준비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4년 신설된 국립문화공간재단을 해체하고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개관준비 사업을 유사 공공기관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관준비비 3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내역사업인 공공미술은행 설치 및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정부미술은행을 운영 중으로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할 실효성이 없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24억 2000만 원 감액 의견을, 김재원 위원님과 조계원 위원님이 상임위와 동일하게 24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추가로 7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90페이지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에 같은 금액을 증액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김재원 위원님과 조계원 위원님 의견은 증·감액 연계사업이므로 문체부와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우선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개관준비는 국립문화공간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상임위 3억 원 감액안을 수용합니다.

다음 공공미술은행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상임위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미술진흥기반 구축 사업에서 95억 8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국립현대미술관 예산에 71억 6000만 원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두 가지 사안 모두 정부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변경 내용이므로 변경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질문이 있습니다.

당인리가 지방이 아니라 마포에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개관준비는 3억 삭감이고 또 상임위에서 똑같은 장소인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은 167억 증액 요구를 의결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당인리 창작발전소 사업은 건립사업, 조성사업으로서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완성이 됐을 때 그걸 국립문화공간재단에서 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총사업비 변경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조달청에서 설계 검토 중이어서 정부안에 반영이 되지 못해서 증액을 요청드렸던 사항입니다.

○강승규 위원 이것은 너무 혼동되는데요.

○조정훈 위원 증액을 전제로 감액을 동의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증액하고는 별개입니다.

○조정훈 위원 별개다?

○김대식 위원 별도지요? 다른 내용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그렇습니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강승규 위원 다른 내용이라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내내역사업명이 다릅니다.

○조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러면 8페이지 부분은 상임위 의견 수용이고, 공공미술은행 부분은 증·감액 연계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기재부안대로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대형한류 종합행사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지자체 개별 홍보비 및 콘텐츠 확보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대형한류 종합행사는 상임위의 2억 원 감액안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소위원장 한병도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9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미술진흥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당인리는 이해가 됐고, 공공미술은행 설치 및 운영지원이 지금 두 가지인데 제가 읽기로는 상임위는 증·감액 연계가 아니라 그냥 감액을 의결한 것 같고 이후에 김재원·조계원 위원님은 증감 연계로 제안을 한 것인데 감액액이 또 다르거든요, 24억과 95억. 그러면 우리가 뭘 의결한 것이지요?

○조계원 위원 24억 2000만 원 감액에 동의……

○조정훈 위원 24억 2000만 원 감액을 의결한 것인가요?

○강승규 위원 감액해서 71억 6000만 원을 증감으로 연계한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두 개 다 받아들인 것이지요.

○조정훈 위원 24억은 그냥 감액이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두 가지 안이 다 취지가 같은 안입니다.

○조정훈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지금 저희가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이것 하고 있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러면 9번은 상임위 의견을 받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2페이지입니다.

10번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입니다.

내역사업인 글로벌 K-존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기존 해외문화원 사업과 중복되고 구체적 성과지표 및 지속가능 실행계획이 없는 일회성 홍보성 사업임을 고려해서 감액이 필요하므로 상임위는 80억 감액 의견을, 그리고 198억 원 전액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글로벌 K-존 사업은 코리아센터가 K-컬처와 연관 산업 해외 수출을 견인하는 데 구심점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임위의 80억 감액안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김기웅 위원님.

○**김기웅 위원** 제가 문화부 사업을 조금 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의 올해 신규 사업을 보니까 해외 문화 전진기지화 159억, K-컬처 해외 확산 지원 이게 33억인가요? 그다음에 글로벌 K-존 해서 지금 198억. 이렇게 3개가 신규로 들어온 것이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여기 증액 요구하신 것처럼 이게 노후화된 것도 있고 지역별로 분산돼 있던 것을 올해 하나로 합친다는 통합 계획이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코리아센터가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합치는 데 드는 게 지금 159억 예산을 잡았고 임차료, 그러니까 다 사무실 새로 얻고 이사하고 이런 비용이 지금 159억이라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맞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김기웅 위원** 그다음에 거기 11개 거점국가에 주는 특별 홍보 예산이 33억, 그것도 맞지요? 신규로 넣었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김기웅 위원** 이렇게 그림을 그려 보면 지금 11개소 주요 거점에서 다 합쳐서 하나로 통합하는 일을 올해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김기웅 위원** 그러면 다들 이사 오고 얻어야 되고 짐 옮기고 일이 많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사하고 옮기는 것은 지금 사무실이 낙후되고 증액 요구한 것처럼 당연히 해야 될 좋은 일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이 없고.

그런데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군데에서 지금 특별 홍보라고 그래 가지고, 특화 홍보 해서 33억하고 198억 이렇게 신규로 책정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김기웅 위원** 제가 볼 때 결론만 얘기하면 상임위에서 일부 감액을 했지만 이 바쁜 사람들한테 너무 과도하다는 거예요. 이사하고 사무실 얻고 지금 올해 난리를 쳐야 되는데 특화 홍보비 33억 줘서 또 하라고 하고 추가로 198억을 또 준다니깐요. 그러니까 지금 신규 예산인데 너무 많은 액수가 쏟아지니까, 올해는 이사하고 정착을 하고 그중에 또 시범적으로 한 33억 쓰는데 이것 198억은 내년에도 해도 되지, 그 많은 분들한테 다 한꺼번에 하라고 이렇게 쏟아붓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이 글로벌 K-존은요 기존에 있는 문화원이 코리아센터가 중심이 돼서, 동경 상해 북경 뉴욕 LA 이런 데 합쳐진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거라서 그 원장은 총괄 지휘하고 그 밑의 콘진원이나 관광공사나 이런 데가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삼 개월에 걸치는 사업이고요, 팝업존처럼. 그래서 추가 부담이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김기웅 위원** 어쨌든 저의 의견은 너무 과도하다, 198억 전액 삭감.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198억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주장이신가요?

○**김기웅 위원** 예.

○소위원장 한병도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기웅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이게 일단 해외문화원 사업과 중복되고 일회성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회성 사업이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아닙니다. 이삼 개월 갑니다.

○조계원 위원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코리아센터에는 재외문화원, 콘진원, 관광공사, 세종학당, 기타 문체부의 한류 연관 기관들이 공동으로 입주한 시설에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진행해서 기존의 한류 열풍을 전반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런 겁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그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충분히 의미가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지금의 한류 K-컬처 열풍을 좀 제대로 도약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이 부분은 최소한의 삭감, 여차피 삭감은 상임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임위 삭감안으로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재외한국문화원 운영 관련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3페이지 K-콘텐츠 펀드 출자입니다.

총 4개 내역사업이 있는데요. 지적사항도 유사하고 같은 펀드 사업이라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에 대해 미투자금액이 상당하고 기존펀드 회수액도 많을 뿐 아니라 내년 예산 역시 집행해도 한 번에 투자가 불가능하므로 금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50억 원 감액 의견을 그리고 1350억 원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

바로 아래의 다른 내역사업인 모태펀드 영화계정 출자 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예산안의 50%인 35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인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예산안의 50%인 32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300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칸의 내역사업인 글로벌 리그 펀드 출자 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예산안의 50%인 3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은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상임위에서 내신 모태펀드 문화계정 50억 이 안만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모태펀드 50억 삭감안 수용이요.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김기웅 위원** 이 펀드 관련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4개 다 묶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문화계정 미투자액이 1조 1616억 원 맞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문화·영화계정 둘 합쳐서 25년 7월 기준 8710억 원입니다.

○**김기웅 위원** 8710억 원,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기재부에서 그동안에 23년도 회계 결산이나 24년도, 그때 임기근 차관이 셧나요? 하여간 얘기하신 게 모든 펀드는 기본적으로 미투자액도 고려해야 되고 실행률도 고려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나누어 주는 게 일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 오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미투자액이 이렇게 많은데 절반 정도 깎아서 이번에 넣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이 미투자액이요 보통 4년 운용하는데……

○**김기웅 위원** 어쨌든 간에 4년 나가는 것 아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꼭 필요합니다.

○**김기웅 위원** 내 말은 50% 주고 또 50% 주면 되지. 그러니까 액수를 보고 기재부차관님이 의견 주시면 되는데 원래 밝힌 의견이 한꺼번에 다 주는 것보다는 나누어 주는 게 맞고 집행률이나 미투자액을 보면서 예산 책정해 주는 게 맞다는 게 기재부 의견이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볼 때는 50% 깎아도 적정하다고 본다 이거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아직 정부 간에 논의 중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미투자액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상적인 수준의 미투자액입니다. 4년 동안 펀드를 운용하기 때문에……

○**김기웅 위원** 기재부차관님이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의견을 주시지요.

○**조계원 위원**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조계원 위원님 말씀 먼저 들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게 실행행률을 따질 때 투자경과율을 함께 따져야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투자경과율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투자경과율에 대비해서 투자소진율은 오히려 투자경과율보다 빠릅니다. 그러니까 50% 기간이 경과했으면 투자는 보통 50% 상회해서 갑니다. 빠르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투자기간 대비 빠른 속도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다음에 콘텐츠 경쟁력의 확보가 자본력의 싸움이 돼 가는 환경에서 콘텐츠 전략펀드의 증액은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부족하다, 감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데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넷플릭스만 해도 한국에 연 1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글로벌 OTT 등 이렇게 해외 자본에 비해서 국내 정책펀드의 규모가 너무나 작습니다. 전체 다 합쳐도 지금 8710억 원 규모밖에 안 됩니다. 늘려

도 부족한 판에 이렇게 대폭 삭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소한 상임위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최형두 위원 최형두입니다.

이게 결산심사 때마다 제기된 거고 지금 펀드 출자 사업비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을 하면 빚을 내고 원리금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는데 펀드 출자를 해도 당해 연도는 그냥 수년째 미투자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 때문에 미디어·방송통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없어지고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가 났는데, 이게 융합 기구로 정부 부처 간의 예산도 칸막이가 없어져야 됩니다. 여기도 있고 과기부도 있고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적지요, 넷플릭스보다는. 그러나 정부 내에서 하는 예산도 통합되어서 통합의 진흥 전략으로 되어야 되는데 규제는 찢뿌리처럼 칭칭 따로따로 돼 있고 기금도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어 가지고 이걸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 위원님 말씀처럼 적어요, 우리가. 적은데 적은 것도 나누어 씁니다. 나누어 쓰면서 규제 부서는 또 층층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정부 부처 총개편하고 할 때 한번 논의가 제대로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미봉된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5페이지 국제문화 정책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사업 목적, 대상, 성과지표가 불명확하고 기존 부처 사업과 중복되므로 상임위에서 20억 원 감액 의견을 그리고 70억 원 전액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은 글로벌 청년 인재 양성과 K-컬처의 지속적인 확산 기반 조성을 위해서 상임위 20억 원 감액안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김기웅 위원 제가 몇 가지 좀 여쭙보겠습니다.

이게 1000명 선발해서 700만 원 준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지금 상임위에서 감액이 돼 가지고요, 위원님.

○김기웅 위원 어쨌든 원래대로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지금은……

○김기웅 위원 이게 항공료 250만 원, 체재운영비 370만 원, 두 달 살게 한다 이것이고, 고졸·저소득·자립준비 청년 형평성 고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선 선발 1000명을 보니까 대학이나 지역 단체에서 이렇게 추천받는 형식으로 하시려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선정 기준 같은 게 따로 지금 현재 준비된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간단하게 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담당 실장으로 하여금 말씀을……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김재현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입니다.

재단 협업형, 대학 협업형 이런 것들이 자율기획형이라고 해 가지고요 이전에 대학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전공한 청소년 중에서 지금 직장을 잡지 못하고 쉬었음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선발해 가지고 이 청년들이 사전에 문화재단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준비해 가지고 현지에 가서 공연이나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런데 여기 가점 요소에 고졸은 뭐예요, 저소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김재현 일단 첫 번째 기준은 쉬었음 청년입니다. 직장이 없는 청년이고요.

○김기웅 위원 그렇지요.

지금 혹시 캄보디아에 우리 20대 청년 2000명 계신 건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김재현 예, 언론을 통해서……

○김기웅 위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지금 왜 일본이나 이런 젊은이들은 없는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그렇게 많이 동남아로 나가는지 아세요? 왜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시냐고, 혹시 왜 이렇게 가는지.

이게 엄청난 유혹이거든요. 여기서는 직업도 못 잡고, 지금 직업 못 잡는 사람들 취업 안 되고 좌절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가지 말라고 그래도 통장 5개 가지고 나가면 1000만 원 받는다고 들고 나가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직업 못 잡은 사람들, 어려운 젊은이들을…… 항공료 250이면 전부 동남아 국가잖아요. 멀리 못 가잖아요. 항공료 250만 원으로 어디를 가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 이렇게 1000명을 뽑아서 어디에 주로 보낼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취업도 하고 혹은 어디 가서 현장 해외 경험한다고 보낸다는데 그 사람들 안전은 어떻게 확보해요?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김재현 그래서 저희가 문화원이 있는 지역들 주로 중심……

○김기웅 위원 아니, 문화원에 보내면 거기서는 젊은이들 그 사람들이 보호합니까, 문화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김재현 현지에서 대사관하고 같이, 문화원이 대사관 소속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아니, 대사관에 경찰인력 1명밖에 없는데, 나와 있는 사람도 어디 있는지 못 찾아서 난리인데 1000명이 그렇게 들어오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어디 보낼지나 그들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준비가 돼서 문제, 만약에 나가서 사고 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혹시 인턴 나갔다가 거기서 무슨 사고 나고 납치되고 이러면 문화부에서 책임지셔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여행자보험도 들고 안전장

치를 해 놓고……

○**김기웅 위원** 현장 가 보시면 그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소위원장 한병도** 정리해 주십시오.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없는 한 이 사업은 안 된다는 거지.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감액하자는 의견……

조계원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저도 의견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쉬었음 청년들, 문화예술 분야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취업과 연계시키기 위한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래서 활동증명서도 발급하고 또 여기 우수 활동자에 대해서는 추천서도 제공하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렇게 할 겁니다.

○**조계원 위원** 또 참여 청년들 간의 네트워크도 구성해서 취업을 서로 도모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고 문화원과 연계한 것은 프로그램 관리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프로그램 관리인데 우려하시는 부분, 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는 이게 예산이 20억 원이 감액되는 바람에, 지금 상임위안으로 해도 20억 원이 감액되는 바람에 아까 김기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0명은 못 하게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못 가고 700명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700명으로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조계원 위원** 이 점은 감안해서 상임위안대로 수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것도 이견이 있어서 국제문화정책지원 사업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6페이지 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입니다.

감사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전까지 해외 공연 및 교장 업무추진비 등 관련 예산 3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금년 국정감사에서 국립전통예술중고의 해외교류 사업 및 자산취득비 관련 지적이 있었던 만큼 상임위의 3억 원 감액안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의 의견 들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3억 원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4번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입니다.

내역사업인 문화예술 전국 유통지원 사업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업 내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사업비 및 운영비 2억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문화예술 전국 유통지원 사업은 상임위의 2억 2000만 원 감액안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아니요, 잠깐만.

○소위원장 한병도 잠시만요.

○송기현 위원 이 내역사업이 다른 거예요, 증액은?

○조정훈 위원 예, 내역들이 다른 겁니다.

○송기현 위원 다른 거예요, 완전히?

○조정훈 위원 뭐랑 뭐랑 다르냐고……

○송기현 위원 지금 창제작 거점 조성 하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한병도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사업 관련해서요.

○송기현 위원 상임위에서 감액한 거하고 여기 김한규 위원님이나 여기서 증액 요구한 것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다른 건가?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상임위에서 한 것은 딱 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비하고 운영비만 감액하자는 의견이고요.

○송기현 위원 오케이.

○소위원장 한병도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8페이지 15번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3000명 지원 근거와 대상자 선발 기준 및 성과 평가방법 등이 미비하여 사업계획이 부실하므로 18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9억 86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지원의 필요성 및 이미 지역별로 매칭이 완료된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안 180억 원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김기웅 위원 제가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이 3000명, 뽑는다고 그래야 되나요, 선발 기준이 뭔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선발 기준이 우선 청년 예술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19~39세 사이어야 되고 그 사람 중에 예술활동증명을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공모에 응하면, 저희 선발에 응하면 1차 서면 심사, 2차 면접을 통해서 뽑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절차는 그런데 생각하시는 16만 명이나 되는 예술활동증명 가진 사람 중에서 3000명, 만약에 1만 명이 왔다 그러면 그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3000명을 뽑나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 기준을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술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 예술인이 한 7만 5000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그중에 순수예술 분야는 한 5만 5000명 그중에 순수창작자는 한 2만 5000명 정도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선인 3000명을 일단 기준으로 잡았고 우리가 각 지역별 17개 시도의 수요를 받아서 1.5배 정도 수요된 것을……

○**김기웅 위원** 기준, 뽑는 기준. 3000명을 어떻게 걸러 내느냐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그 순수창작예술 2만 5000명 중에서 창작계획서를 제출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각……

○**김기웅 위원** 아니, 창작계획서 제출을 할 텐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자의 창작 역량 30%, 활동계획의 실현 가능성 50%, 활동계획의 공공성 20%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이게 시범사업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조계원 위원** 그래서 청년 순수창작자 2만 4427명의 10% 내외 규모로 산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성과지표는 결과 보고를 받는 거지요, 창작물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것으로 검증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발 기준도 아까 얘기했던 연평균 수입 1150만 원 그리고 예술활동증명이 된 자 그리고 또 예술활동증명 된 자 중에서 30대 이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39세 이하입니다.

○**조계원 위원** 그래서 이게 먼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전년에 중복성이 우려된다고 하는 부분 있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술활동준비금이 있는데……

○**조계원 위원** 그것하고 중복될 염려가 없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없습니다.

○**조계원 위원** 여기 먼저 선발되고 여기 선발된 사람은 예술활동준비금 그것에서는 배제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거기 못 갑니다.

○조계원 위원 제외되기 때문에 중복의 염려도 없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조계원 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것은 좀 수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문화예술부에서 청년 아트를 발굴해서 갑자기 3000명에게 180억 원을 지원하겠다. 그 3000명의 선정 기준이 뭐냐 하니까 계획서를 받아서 창작성이나 실현성 등을 평가하겠다. 그런데 정부가 어떤 재정을 투입할 때는요…… 지금 청년 예술가 3000명을 공모를 내 가지고 계획서 받아서 돈을 지원하겠다. 사업을 그렇게 하나요, 우리가 재정 지원할 때?

○조계원 위원 예술활동증명이 있는 사람.

○강승규 위원 제가 차관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문체부에서 그게 청년 예술이든 뭐 조형예술이든 지원을 한다고 그럴 때 어떤…… 지금 청년 예술의 어떤 분야가 굉장히 핫한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서 이것을 마중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와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갑자기 새 정부 들어와서 청년 K-Art 창작 지원한다고 그래 가지고 청년 3000명을 뽑아서 지원한다는 게, 이런 것을 우리는 포폴리즘이라고 해요.

○소위원장 한병도 정리해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지원하고, 또 청년 예술 어렵지요. 그러나 정책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렇게 돈을 살포하는 것까지 문화예술에 계속 하는 것이…… 펀드도 그렇고요. 김기웅 위원님이 하니까 아까 제가 얘기를, 펀드도 그냥 민주당 정부만 들어서면 갑자기 펀드가 10배씩 늘어나요. 그동안 그러면 우리 문체부는 지난 정부에서는, 보수정부에 있을 때는 문화부의 일을 안 했어요? 그래서 펀드가 그렇게 적었어요? 펀드 규모가 10배씩 늘어나고, 지금 청년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갑자기 3000명을 지원한대요. 주면 좋지요. 그러면 실버 아트도 있지요, 실버 아티스트들도 있지요. 실버 아티스트들한테도 줘야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책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한병도 정리해 주세요.

○강승규 위원 잠깐, 한마디만 더……

○소위원장 한병도 잠시만요, 토론을 하면서 자꾸……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이런 주 사업들을 이야기하는데 양당에 대해서, 제가 어제든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좀 이견 지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과 당과 연계된 이런 것들은, 토론을 하면서 그 사업에 집중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시정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니까 보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기에 앞서서 소위 운영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상임위 예비심사를 마친 15개 위원회 소관 부처의 예산안 등에 대해 감액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님이 앞서 지정하신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제출기일인 11월 6일이 지난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는 아직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 우리 소위원회의 원활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외교통일위원회 등 예비심사가 끝난 위원회 소관 부처의 감액심사가 끝나면 운영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향후 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감액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8페이지 16번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입니다.

내내역사업인 대중음악 체험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 이익 보전을 위한 사업이므로 8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내내역사업인 대중음악 공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4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2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정훈 문체부 1차관이 법안 심사 때문에, 기조실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정훈 먼저 첫 번째, 대중음악 체험시설 조성사업은 대중음악 장르를 대표하는 최초의 공공전시·체험 인프라 조성을 위한 것으로 정부안 80억 원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신 대중음악 공연환경 개선사업은 신속한 대중음악 공연장 확보를 위해 정부안 40억 원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김기웅 위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는 문체부에서 민간에 주는 경상보조금액으로 613억 원 정도가 신규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정훈 예.

○김기웅 위원 613억 원이 신규로 지금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현재 공연 같은 것 보면 대형 공연하면 수익이 적게는 420억, 많이는 1조 원까지 난다는 게 문체부 보고에도 있고 그런데 민간이 돈을 벌었을 때, 1조를 벌었을 때 공공 환원하거나 일부 돌려 내는, 피드백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아무런 제도가 없고요. 그냥 그들이 가지는 거겠지요.

그런데 서울아레나 같은 경우도 카카오가 98% 출자한 사업인데 민간이 그렇게 출자를

해서 다 하고 있고 많은 수익을 벌고 있는데 정부가 거기에 80억 원이라는 돈을 내서 시설 개선이든 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게 언뜻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정훈 지금 대한민국은 외래관광객 2000만 시대를 맞고 있고 한국의 케이팝 문화를 체험하고 느끼기 위해서 한국으로 오시는 외래관광객들이 대부분인데 실제로 이 케이팝과 대중문화를 제대로 체험하고 또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외래관광객들이 갈 곳이 없어서 JYP 명패 앞에 가서 사진을 찍고 있는 그런 정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음악 체험시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외래관광객들에게 한국의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게 주요 목적이구요.

특히 지금 현재 조성 후보지인 서울아레나 부대시설은 카카오가 기부채납을 해서 서울시가 소유하는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와 협업해서 공공성을 유지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기웅 위원 저는 그만하고 혹시 다른……

○소위원장 한병도 결론을 내 주십시오.

○김기웅 위원 저는 어쨌든 민간보조사업인데 기존에 있는 사업이 613억이나 있으니 이걸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일단 삭감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테일러 스위프트 아시지요? 유명 가수들이 한국에서 공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용 아레나가 없어서 코리아 패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세계적인 케이팝 공연도 제대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아까 카카오가 98%라고 했는데 결국 이걸 서울시 소유로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정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아까 40억 추가로, 공연환경 개선사업도 이걸 부대시설은 서울시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정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간 지원이라고 보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더구나 지금 케이팝의, 한류의 열풍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아레나와 또 부대, 대중 공연시설, 음악 공연환경 개선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상임위원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것 보류하고 재논의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페이지는 106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세출, 감·증액사업이 1건 있습니다.

광역권 관광개발(자율)입니다.

내내역사업인 뷰티스와 웰니스 관광 거점화 사업에 대해 진남관 주변 호국문화 관광플랫폼 조성(여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조계원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2억 원을 감액하고, 2억 원 증액은 바로 다음 페이지 맨 위의 칸에 있습니다.

증·감액 연계사업이므로 문체부와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여수 뷰티스파 웰니스 관광 거점화 사업은 25년 예산
실집행률을 고려하여 상임위의 2억 원 감액안을 수용합니다.

다만 연계 제기한 진남관 주변 호국문화 관광플랫폼 조성사업 증액안 2억 원에 대해서
문체위에서 수용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기재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새로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 동일
계정, 동일 지역에 있는 사업은 맞는데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신규 사업은 못 하
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을 감하고 새로운 사업을 신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내내내역을 조정해서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획
을 세우는 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 가능하다고요, 세우는 것이?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시설 설치하는 힘들고요, 기존에 계획 세우는 것까지는 가능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계획 세우는 것까지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조계원 위원 이게 지금 지특, 지난번 감사원 지방이양 사업의 지적 사항 중에 이게
해당이 안 되는 조항이 있는 걸로 확인했는데요.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사안인데.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요, 저희가 확인한……

○조계원 위원 그 지역의 여러 지역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그래서 통영에……

○소위원장 한병도 그것은 확인을 해 보세요.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지역예산과장 김혜영 기재부 지역예산과장입니다.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초광역, 그러니까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양 사업이 아니라서 신규 사업을 반영할 수 있지만 계획에 들어가야 되
고요. 밑에 있는 관광자원 기반조성 사업은 지역주도형이라서 지방이양 사업으로 감사원
에서 봤기 때문에 거기에 신규 사업을 반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조계원 위원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기획재정부지역예산과장 김혜영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업은 지방이양 사
업의 성격은 아닙니다.

○조계원 위원 일단 어쨌든 이것은 연계 사업이니까……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 이것 보류하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조계원 위원 제가 이것 한번 읽어 드릴게요.

○조정훈 위원 보류하고 기재부하고 좀 상의를 하시지요, 조 위원님이.

○소위원장 한병도 내부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 증액 사업 1건 있습니다.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5년 연말 기준 예상 여유자금 회수액 451억 1500만 원을 반영하여 여유자금을 현실화하고 그동안 문예기금 수입으로 계상되지 않았던 건축물미술작품대체기부금을 수입으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73억 3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견이 있습니다.

증·감액 연계 사업이므로 문체부와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정훈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는 문예기금의 수입이 잘못 편성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상임위의 173억 3100만 원 증액안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기재부 의견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국민체육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서 문예기금의 수입을 증액시키는 항목으로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24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출, 감·증액 사업 1건 있습니다.

문화예술 향유지원입니다.

이것은 내역별로 나눠서 심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의 세 번째 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내역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해 효율성 개선 없이 증액이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2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정훈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상임위의 20억 원 감액안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내역사업인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대상을 확대했고 청년의 지역 간 차별을 조장하여 사업계획이 부실하므로 증액분 191억 4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15억 7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정훈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안 361억 4600만 원이 유지되기를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김기웅 위원님.

○김기웅 위원 제가 몇 개 확인만 좀 할게요.

이게 예타 대상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정훈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예타 대상인데 문화진흥 사업이라는 이유로 면제를 받은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정훈 예, 심의를 거쳐서 예타 면제가 되었습니다.

○김기웅 위원 심의를 받아서?

그러면 두 번째는, 이번 예산안의 특징이 문화부에서 아까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또 청년문화예술패스 해서 청년 대상이 된 사업들이 새로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올해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사업이 이렇게 중점이 됐는지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좋은 취지라고 하니까.

그런데 앞엣것 두 개도 전부 감액 의견을 냈듯이…… 왜 열아홉에서 스무 살로 나이를 1년 올렸습니까? 확대한 이유는 뭔가요? 근거, 왜 열아홉 살만 주다가 열아홉 살, 스무 살을 주느냐 이거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문체부 문화정책관입니다.

작년과 올해는 19세를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20세까지 추가를 했고요.

○김기웅 위원 글썄, 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만 19세는 대학교 1학년이 되는 나이고요. 만 20세는 재수를 했을 경우에 대학교 1학년인데 저희가 비교적, 청년이 청년기본법상 만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연령으로는 저희가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19~20세 사이는 문화예술의 어떤 취향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면 그렇게 더 21세, 22세까지 계속 확대될 수도 있겠네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그 부분은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야 되고요.

○김기웅 위원 이렇게 대학생들 대상 다 해 주고.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보통 일이 년, 청년기 초기 단계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입니다.

○김기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늘릴 때 분명한 기준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장기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올해는 한 살 더 해 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라 재정 운용을 하는데.

내년에는 21세까지 하실 수도 있겠네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그거는 지금 간이 예타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김기웅 위원 예타 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올해 내로 마무리가 되고요.

○김기웅 위원 이게 계속 확대될 거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

○김기웅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예.

○김기웅 위원 그러면 지방하고 서울하고 주는 돈 차이는 왜 생긴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수도권에는 10만 원 그다음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데 아무래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술 향유 차원에서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좀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비수도권은 15만 원 우선……

○김기웅 위원 그런데 이것도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차별이 아니고요.

○소위원장 한병도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기웅 위원 일단 저는 지금 청년 부분에 문체부에서 주고 있는 예산 전체, 3개 종류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지난해에도 추진했던 사업이고 국감에서 문체부에서 아주 잘한 사업으로 평가됐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확장된 사업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정훈 예, 작년과 올해 높은 평가를 받았던 사업입니다.

○조계원 위원 그래서 당연히 긍정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유인촌 장관 시절에 진행된 사업이었지요? 그게 높은 평가를 받은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정훈 시범사업을 거쳐서 내년 본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왜 정부가 바뀌면 이 사업이 갑자기 예산 지원이 중단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의 집행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범주를 넓히기 위해서 19세에서 20세까지 확대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정훈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정부 문체부에서도 모범사업으로 평가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삭감돼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요.

○소위원장 한병도 이것도 이견이 있으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영화발전기금 수입, 증액사업 2건이 있습니다.

1번 기금 전입금과 2번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영화발전기금의 여유자금 고갈 상황에서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전입금 확충이 필요하여 3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회계 기금 간 내부 거래이므로 문체부와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문체부 의견 들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정훈 영화발전기금 전입금 사업은 2026년 고갈 위기에 따른 최소 유동성 확보 그리고 영화계 정상 지원을 위해 예결위의 350억 원 증액안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기재부 의견을 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체육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한 것으로서 전입금을 증액시키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50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한 가지만요.

그러면 이게 체육기금에서 350억을 감액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입을 하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조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영화발전기금 지출, 감·증액사업이 1건 있습니다.

영화 창제작 지원입니다.

첫 번째 칸, 내내역사업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에 편성된 심사 및 관리운영비에 대해 심사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및 심사과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3억 24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정훈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은 정부안 77억 3700만 원이 유지되기를 건의 올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김기웅 위원님.

○김기웅 위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 취지 자체는 원래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 입장이 지금 공정해야 할 영화진흥위 심의가 좀 편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투명하게 되는 조건이 안 되는 한 저희가 볼 때는, 근거가 있고 또 반대 의견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너무 편향적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담당할 예산은 드릴 수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한병도 이것도 삭감 의견인가요? 삭감하자는 의견이지요?

○김기웅 위원 예, 전액 삭감.

○소위원장 한병도 두 분 중의 한 분 말씀하세요.

○임미애 위원 얘기하세요.

○조계원 위원 독립영화 제작, 너무 정치적 편향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극한직업’의 이병헌 감독, ‘범죄와의 전쟁’의 윤종빈 감독, ‘다음 소회’의 정주리 감독, 이분들이 어디서 성장한 감독들입니까? 바로 독립예술영화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정훈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독립예술영화 인정 심사하고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작품선정 심사는 별개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정훈 예, 지금 이것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조계원 위원 이것은 제작지원 작품선정 심사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정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왜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말이 나왔으니까, 독립예술영화 인정 심사도 정치적인 편향성은 없어야 되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금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정훈 예, 현재 독립영화 인정 심사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업무규정 등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 부분은 독립예술영화를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대로 상임 위안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이것도 이견이 있으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은 저는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좀 합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웅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 심사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부분은 사업비 자체가 불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과 이런 것들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그런 당부를 특별하게 관계부처에 주문을 하고 이 예산은 정리하고 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강승규 위원님.

○조정훈 위원 강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이것 알고있고요. 다만 똑같은 논리로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이 없어서 예비비 다 깎으셨어요. 똑같은 논리 적용되고 이것 소소위 들어갈 때 어떻게 개선할지 안 갖다 주셔야 되고 그것 아니면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규 위원 삭감을 일방적으로 합니까, 합의해서 해야지.

○조정훈 위원 저희는 삭감 제안이라는 거지요.

○김한규 위원 삭감 의견을 내시겠다는 거지요.

○조정훈 위원 강력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더 이상 발언은 신청하지 않지만……

○소위원장 한병도 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독립예술영화에 독한 마음을 갖고 계시네요.

○조정훈 위원 독립성이 없잖아요.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언론진흥기금 지출, 감·증액사업이 1건 있습니다.

뉴스미디어 디지털 혁신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 내내역사업인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운영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운영 부실, 관리감독 부채를 고려해 5억 1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정훈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 사업은 현재 수준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비용으로 상임위의 5억 1300만 원 감액안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출, 감액사업이 1건 있습니다.

1번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관광산업 융자지원 관련 3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의 적정 규모 운용을 위해 상임위의 30억 원 감액안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 지출, 감·증액 사업이 1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지원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지원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의 세 번째 줄입니다—사업내역에 문화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적절치 않으므로 2억 6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체육회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상임위의 2억 6500만 원 감액안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이거는 스페셜올림픽 감액을 왜 상임위에서 의결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이거는 상임위에서 체육기금으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강승규 위원 체육기금으로, 스페셜올림픽은 장애인 체육이나 이런 것과 관련 없나요? 오직 문화만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체육 스포츠 단체인데 그 안에 문화예술 활동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체 자금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강승규 위원 아니, 지금 문체부가 체육하고 문화예술하고 완전히 구분해서 그렇게 지원해요?

저는 이거 반대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차관님, 이거 계속 해 왔던 사업 아니에요?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이거 계속 해 왔던 사업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2013년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

○김대식 위원 계속 해 왔던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장애 그쪽에서 반대를 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이게 또……

○김대식 위원 상임위 것은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그거 하는데, 일단 해 왔던 사업을 왜 장애라고 해서 그렇게 빼나? 어떻게 빼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장애인이 유형별로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는 약 7억 원 정도 이런데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지금 30억 정도 되는데요 예산의 차이도 많고 해서 너무 과다한 지원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 또 왜 예술 활동을 자체 자금으로 하도록 해야지 체육기금을 지원하냐 이런 상임위에서의 지적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계속……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그건 관계없이 정책적인 것은, 계속사업은 특별한 그게 없으면 유지되는 게 맞지. 문재인 정부 때도 했고 지난 정부 때도 했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왜 이거를 감액하고 삭감을 하는 거지?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원안 유지하자는 주장이신가요?

○조정훈 위원 원안 유지.

○김대식 위원 보류……

○소위원장 한병도 김대식 위원님, 지금 원안 유지?

○김대식 위원 원안 유지.

○소위원장 한병도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경우에는 운영에 있어서 그동안 사실 문제점을 노정해 왔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이 예산이 관리가 되고 집행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걸 통제를 전혀 안 받았습니다.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되었고, 그 사업 내용 자체에 체육활동이 아닌 문화행사까지 포함돼 있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상임위의 의견 조율을 통해서 예산이 삭감이 된 겁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것도 이견이 있으므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마지막 심사 대상입니다.

기타 특이사항이 5건 있습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예술산업 금융지원(융자)입니다.

세부사업명을 예술산업금융지원시범사업(융자)로 변경이 필요하고, 두 번째 이 사업의 융자금 예산 200억 원의 비목을 기타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번 일반회계의 함께누리 지원 사업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신규 편성된 모두예술콤플렉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예산 2억 5000만 원은 민간경상보조로 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3번 일반회계의 한글박물관 운영입니다.

일반용역비로 편성된 어린이 실감형 체험전시실 예산 5억 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4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은 오류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5번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의 아시아문화역량강화지원사업(ODA)은 내역사업인 몽골 문화자원관리시스템 구축에 편성된 일반연구비 예산 7억 7000만 원과 내역사업 스리랑카 문화자원관리시스템 구축에 편성된 일반연구비 예산 2억 8000만 원은 민간위탁 사업비로 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문체부와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문체부 이야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정훈** 먼저 첫 번째, 172쪽 1번 예술산업 금융지원입니다.

예술산업 금융지원사업은 기존 사업명에서 ‘시범사업’을 추가해야 한다는 상임위안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비목이 잘못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억 원 전액 기타 민간융자금(450-04)으로 변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게 수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정훈** 예.

○**소위원장 한병도** 하나씩 할까요?

기재부 의견 들겠습니다.

(「전체 다……」 하는 위원 있음)

한꺼번에 할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다 모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건이나 비목 변경 건이 나왔는데……

○소위원장 한병도 예, 5건 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문체부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비목 변경하는 데 찬성하고요.

단 두 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보면 함께누리 지원의 모두예술콤플렉스 조성인데요. 이것은 원래는 지자체 보조를 민간경상보조로 바꾸도록 돼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일반연구비로 해 주시면 이것을 경쟁해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 하나만 여기 있는 안에서 변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일반연구비로 비목 변경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 들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정책 연구비 아닌가요? 민간 연구비인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 일반연구비가 정식 비목이 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한병도 다 동의하시지요? 부처도 의견 없으시지요?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재부차관 말씀하신 대로 다섯 항목이나, 이게 액면 그대로 받아 줘서 실수를 하신 거고 조금 더 따져 들어가 보면 의도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집행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정훈 죄송합니다.

○조정훈 위원 실수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기재부도 부끄럽다고 했는데 더 부끄러운 건 문체부여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정훈 죄송합니다.

○조정훈 위원 기록에 남기고 내년 예산을 짜실 때는 더 꼼꼼히 저희가 볼 테니 이런 실수 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정훈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지난 정부 때도 똑같이 실수했던 거 아닌가요, 이것은?

○조정훈 위원 지난 정부 때도 잘못했고, 그게 무슨 정권 문제야.

○소위원장 한병도 다 끝났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국가유산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허민입니다.

○국가유산청기획조정관 황권순 기획조정관 황권순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들 오세요.

수석전문위원님 보고 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74페이지 국가유산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감·증액사업이 3건 있습니다.

1번 국가유산 교육활용 진흥입니다.

내역사업별로 나눠서 심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국가유산 체계 전환 안내판 정비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11억 5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정부는 감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75페이지의 내역사업인 국가유산 미디어아트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국가유산의 본질적 가치보다 관광적 활용에 초점을 맞춘 행사성 사업으로 국가유산 보존정책의 방향성과 부합하지 않고 국가유산의 고유한 정취와 역사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증액분 41억 9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여러 증액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미디어아트사업은 국가유산을 훼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표적 지역 야간 콘텐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청장님, 국가유산청의 본래 목적이 뭐예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저희는 보존도 하면서 또 각 지역의 활성화 사업도 같이하고 있고요.

○강승규 위원 활성화가 뭘 활성화합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를 들어서 경주 황리단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발굴한 다음에 그것을 계속 지역을 위해서 활성화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연간 1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올 정도로 됐고요. 그리고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도 이번에 APEC 때……

○강승규 위원 잠깐만, 제가 묻는 말에 좀……

그러면 국가유산청이 활성화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각종 문화사업 프로모션, 관광객 유

치 등을 하는 게 국가유산청의 업무예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일단은 보존을 기본으로 하면서요 요즘은 신산업과 함께 지역과 함께하는 것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강승규 위원** 신산업이라는 게 뭔데요? 국가유산청에서 신산업이 뭔데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신산업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K-헤리티지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XR, VR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첨성대같이 미디어아트를 쓰는 그런 일을 좀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국가유산청의 본래 목적은 전통이든 근대든 현대든 국가가 유산으로 관리해야 될 만한 그런 자산들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게 주 임무인데 미디어아트라는 것은 하나의 이벤트이고 문화예술이에요. 유산청이 아무리 첨성대를 많이 알리고 싶다 그래서 첨성대를 가지고 미디어아트를 만드는 게 유산청의 고유 업무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 제가 30초에 끝내겠습니다.

지난해까지 41억을 써서 미디어아트 한 것을 보니까 백제로의 시간여행, 이게 유산청 일일까요, 문체부의 일일까요? 저는 이런 것은 예술이고 문체부의 사업이지 유산청의 국가유산 관리업무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45억 정도 미디어아트를 통해서 홍보에 활용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등을 계속 유산청이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해야 된다는 의견이지 않아요? 감액해야 된다는……

○**강승규 위원** 예.

○**소위원장 한병도** 조계원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국가유산 미디어아트사업은 최첨단 미디어 디지털 기술을 국가유산에 접목해서 전국에 산재한 국가유산의 가치를 관람객들에게 보다 쉽고 흥미롭게 알림으로써 관람객의 관심을 높이고 지역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유산의 활용사업이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냥 국가유산을 묵히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케데헌 열풍이나 이런 것도 보면 사실 우리 국가유산들이 많이 반향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밤에도 특히 핵심 사업이 야간 콘텐츠, 밤에도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거리상의 제한도 좀 극복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부수적으로 수반된다, 경제사업은 아니지만 부수적으로 그러한 효과까지 있다 이런 맥락이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한말씀 올리면……

○**조계원 위원** 이게 유산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지역별로 공모들이 많이 들어와서요. 올해는 열 군데, 내년에는 열두 군데 양산 통도사나 진주, 경주 같은 데에서 다 선정이 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 좀 해 가지고 의원실로 보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목록을.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잘 알겠습니다.

이건 있으므로 이것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청장님, 그것 오늘 좀 보내 주세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76페이지 2번 국가유산 콘텐츠 개발보급입니다.

내역사업인 국가유산 디지털 원형데이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두 번째 동그라미의 셋째 줄입니다—감사 및 수사 종료 전까지 사업 진행 및 사업 방식 변경 검토가 필요하고 하도급 업체들의 미승인, 입찰담합 의혹 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므로 8억 985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정부는 감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77페이지 3번 국가유산 행정정보 융합체계 구축(정보화)입니다.

내역사업인 국가유산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 앞의 2번 사업과 같은 이유로 4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정부는 감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페이지는 216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가유산청 마지막 심사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이 한 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국유유산관리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구 서울역사 관리 및 운영(16억) 사업에 대해서—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관리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위탁관리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관리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현 예산 16억 원을 모두 민간위탁사업비로 비목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정부는 비목 변경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것은 기재부 의견을 들어야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관리 효율성 차원에서 비목 변경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비목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 소관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 오세요.

수석전문위원 보고 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소위 자료 9권입니다.

9권의 3페이지 국토교통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13건이 있습니다.

먼저 3페이지의 1번 사업부터 6페이지 9번 사업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사업의 감액 사유가 동일하므로 1번 사업을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사업의—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건설 전주기 안전혁신 기술개발 사업(R&D)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이 사업 예산 78억 72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 전주기 안전혁신 기술개발 사업(R&D)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 전 주기적으로 사각지대 없는 건설공사·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파편화되어 추진되고 있는 관련 R&D를 통합 관리·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개별 편성된 9개 세부사업을 이 사업으로 통합하기 위해 해당 9개 세부사업을 전액 감액함과 동시에 이 사업은 433억 6200만 원 신규 증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세부사업 기준으로 증·감액 연계 사업이므로 사업 통합에 대해 일괄해서 국토부와 기재부의 의견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국토부 의견 들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저희 국토부는 이번 감액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이것은 9개의 개별 사업들을 하나의 전주기 사업으로 포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줄어들거나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절차상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기재부 의견 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원래 이렇게 예타를 한 묶음으로 받게 되면 한 개 사업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는 세부적인 R&D 과제별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 내부적으로는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되는 부처에 안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대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러면 다음은 7페이지 되겠습니다.

7페이지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국토·교통) 분야가 되겠습니다.

앞서 심사하신 부처의 예에 따라 보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한병도 예.

다음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8페이지 국토교통 혁신펀드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투자 시기를 고려한 예산 반영을 위해 120억 원 중 1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국토교통 혁신펀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펀드의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저희가 금년 이것 지적이 있을 때가 한 8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의 집행 기준으로 어느 정도 집행이 됐고 내년 초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액에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형두 위원 최형두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잠시만요.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아니, 그렇게 보고하는 게 어디 있어요? 숫자도 안 내놓고 대충 다 됐으니까 그렇게 믿어 달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투자가 사실상 종료된 겁니다, 21년까지. 2020년, 2021년 투자 종료된 거고 이것은 투자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결성액 526억 원 중에 71.4%인 376억만 투자되고 150억 원은 미투자된 겁니다. 이것 뒤에 그때라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다 끝난 사안이에요. 그래서 미투자 상태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투자 시기를 고려한 예산 반영을 위해서 120억 원 중 100억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갑자기 여기 와서 뒤늦게 파악해 보니까 8월 이후에…… 숫자를 가져오든지 그것도 아니고 지금 얼버무리면서 여기서 모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 그때 기준으로 파악해서, 벌써 종료된 사업에서도 150억 원 미투자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전용해 쓰라는 얘기입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위원님, 제가……

○소위원장 한병도 잠시만요.

이소영 위원님 말씀 들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 부분은 국토교통 분야의 모태펀드 사업인데요. 모태펀드 사업의 자펀드 실집행률이나 잔액 문제는 앞서 다른 부처에서 계속 논의되고 보류된 건이어서 함께 보류하고 일괄적으로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이것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9페이지의 12번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청년인턴 운영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청년인턴의 중도 퇴사를 고려하여 실제 청년인턴의 근무 일수 비율을 반영한 예산 1억 6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인턴의 실제 근무 일수가 좀 부족하기는 한데요. 이게 중간에 퇴사를 하고 다른 직장을 잡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감액에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특별히 말씀 없으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0페이지 13번 부동산투자회사 감독 및 검사 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리츠시장 건전성 강화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회의비를 직접경비로 별도 계상하였으나 별도 편성할 근거가 없으므로 2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물론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회의비가 제경비에 포함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나 그다음에 자문비나 이런 부분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것을 직접경비로 별도로 계상한 부분은 조금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부처에서는.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송기현 위원 직접경비로 하는 것하고 그와 별도로 다른 회의비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래요?

그러면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58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세출에 감액사업이 1건 있습니다.

1번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앞서 살펴보신 10개 부처에 대한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페이지는 109페이지입니다.

○송기현 위원 그 전에 잠깐, 우리가 소위에 다 같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AI 신기술 지원에 관해서 국토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소위원장 한병도 예, 말씀해 주세요.

○송기현 위원 국토 관련된 여러 가지 설계를 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평가하는 데 교통량 평가하고 그럴 때, 영향력 평가할 때 그때 아마 AI 기술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사실 그런 것을 평가하는 자체도 산업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된 데가 이쪽이지 않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맞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래서 나중에 소소위든 소위든 논의할 때 국토교통위 관련된 이 부분에 관해서는 AI 특성이나 굉장히 발달 가능성이 있다, 적응성이 있다라는 점을 많이 참작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이건 감액이 아니고 보류니까요.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0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09페이지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세출, 감·중액 사업이 3건 있습니다.

먼저 1번 새만금신공항 건설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따라 현재 상태에서 집행 자체가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11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정부안과 감액 의견안의 차액 100억 원에 대해서 보완기본설계조사 진행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로 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비목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새만금 같은 경우는 정부안 유지를 저희가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소송에서 충분히 승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기재부 의견 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비목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1심 판결을 3심 판결과 같은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목 변경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새만금신공항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서울행정법원의 취소 판결에 따라서, 사실 사업 자체가 지금 소송 중인데 이길 수 있다라고 그러지만 일단 행정법원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취소됐고 올해 예산도 집행이 안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최종심까지 가서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는 당연히 예산이 철회되고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 다시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송기현 위원** 여기까지만 제가 먼저 할까요?

○**소위원장 한병도** 예.

○**송기현 위원** 차관님, 지금 1심 판결이 난 거예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1심입니다.

○**송기현 위원** 1심 판결과 같이해서 집행정지 이런 게 나온 건 아니고.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집행정지 아직 안 했습니다. 변론만 했습니다.

○**송기현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공사는 진행이 될 필요가 있고 될 수도 있고 두 가지 다인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송기현 위원** 필요도 있고 지금 현재로서도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할 수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러니까 1심 판결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걸 전부 감액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인 큰 규모에서 볼 때는 안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국토부에서 강력하게 의견을 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류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한병도** 예, 이 항에 대해서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10페이지 2번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사업 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경제성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공사비 48억 3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아래 칸에 451억 55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타당성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면 결론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 사업타당성이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상임위에서 의결된 증액안으로 저희는 반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먼저 송기현 위원님 듣고 그다음 들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차관님 잘 설명하셨습니다. 어쨌든 이게 내년 상반기 지나면 실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이것이 정말 이 지역의 특별한 여건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저는 이게 내년부터 꼭 우리가 예상한 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실제 공사되는 것에 대비해서, 용지 보상하는 것까지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국토부 의견 같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액 상임위 의 결되고……

○송기현 위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지요. 이것은 어차피 증액 예산이니까 증액할 때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실제 수요보다 50%가 과다 산정됐고 2050년 목표 기준 예측 수요가 당초 대비 83%나 감소하고 B/C 값이 예타 당시 4.3%에서 0.42%로 급감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국토부가 다시 타당성평가를 하는데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국토부의 행정 수준을 알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이렇게 분명히 결과 한 것을, 그러면 이것 감사도 조작됐다는 겁니까? 감사가 조작됐다는 거예요? 다른 감사도 아니고 25년 9월에 한 건데 이것도 지난 정부에서 감사를 조작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국토부에서 그런 의견이신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아니, 위원님 제가 감사원이 조작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강승규 위원 아니,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면서요,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는데.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래서 KDI에서 타당성재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KDI하고 논의를 해 본 결과는, 저희가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는……

○강승규 위원 아니, KDI는 별나라 KDI예요? 아니, 국토부가 조사한 것과 KDI가 1년도 안 지나서 조사하면 다시 이게…… 이걸 국민들 보고 믿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 KDI가 다시 조사하면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소위원장 한병도 이것도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것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11페이지 3번 김포공항 시설개선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6년에는 공사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감리비 예산편성의 이유가 없어 감리비 예산 3억 3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감액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설계비 증액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고려해 주십사 건의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감액하고 설계비 증액으로.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건 아니고……

○소위원장 한병도 그게 안 되나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냥 감액하고 증액 심사하실 때 고려를 해 달라는 말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알겠습니다.

잠시 착각했습니다.

감액에 대해서는 이견 없으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소위원장 한병도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페이지는 160페이지입니다.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지출, 감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이 사업에서 설정한 이차보전율보다 실제 이차보전율이 낮을 것으로 보이므로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이 부분은 감액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페이지는 172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 기타 특이사항이 2건이 있는데 1번 건은 앞에서 이미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번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의 일반공항 시설관리입니다.

내역사업인 여수공항 시설개선 사업의 경우 비목이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는데 이를—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국토교통부가 여수공항의 공항시설개선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비·건설비 비목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국토부와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국토부 의견 들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비목 변경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기재부 의견 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비목 변경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비목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바로 이어서 174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 마지막 심사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혼합형 민간투자사업 BTL 한도액안, 신규 사업입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1조 7235억 원 신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토부와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증액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기재부 의견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민자적격성조사가 완료되어 BTL 한도 증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감액심사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강주엽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획조정관 박상옥 기획조정관 박상옥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들 오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75페이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 감액사업 1건, 감·증액 사업 1건 있습니다.

먼저 1번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낙찰차액에 대해 연부액 비율만큼인 2억 5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강주엽 감액에 대해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76페이지 행복청 마지막 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대외유치협력 기능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행정수도 세종추진 국민소통 및 홍보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이 사업은 행복청의 본래 기능과 관련이 없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자체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상임위에서 5000만 원 감액 의견 그리고 5억 원 감액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강주엽 상임위 의결안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김기웅 위원님.

○김기웅 위원 5억 이하는 얘기하지 말자는 그런 여론도 있긴 한데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이거 상임위에서 좀 적게 왔지만 일단은 홍보 예산이고 중복성이 있어서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은 간사님들끼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승규 위원 보류.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할까요?

○강승규 위원 예.

○소위원장 한병도 대외유치협력 기능지원 사업……

○임미애 위원 보류하기는 좀 그렇다, 이것도.

○노종면 위원 김기웅 위원님께서 합의해 주시라고 의견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송기현 위원 보류를 하더라도 얘기는 하고……

이게 행복청이 홍보를 하는데 세종시에서만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고 실제로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행복청에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업무예요. 그렇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강주엽 예, 맞습니다.

○송기현 위원 왜냐하면 현재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국민께 알리는 것도 세종시의 업무가 아니라 행복청의 업무예요. 그렇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강주엽 세종시에 편성돼 있는 홍보 예산은 세종시 시정에 대한 홍보 예산이고요.

○송기현 위원 세종시를 홍보하는 예산이고, 그거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강주엽 예, 서로 내용은 다릅니다.

○송기현 위원 그다음에 세부 내역 보면 여러 가지 국민 참여 등 자체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뉘져 있어서 단지 홍보비만은 아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강주엽 예, 맞습니다.

○송기현 위원 일단 그렇게 회의록에 남겨 놓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김기웅 위원님,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됩니다. 의견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김기웅 위원 우리 간사님이 보류해 달라고……

○강승규 위원 아니, 아까 보류라고……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요? 아니요……

○강승규 위원 보류, 보류.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장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김의겸입니다.

○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 정인권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 정인권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들 오세요.

수석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82페이지 새만금개발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액사업이 1건 있습니다.

면허료 및 수수료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인접 토지의 공시지가를 최근 지가 추세를 고려하여 조정함으로써 세입액을 5억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장 김의겸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형두 위원 최형두입니다.

아, 동의했습니까?

○소위원장 한병도 예, 이것 증액 건이네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새만금개발청 마지막 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이 1건 있습니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공정률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할 경우 향후 대규모 불용 또는 이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집행 가능 범위를 고려해서 5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장 김의겸 저희는 원안을 유지하기 원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최형두입니다.

그래요, 우리 새만금 다 개발돼서 잘되면 좋은데 지금 이게 국회의 선의와 관계없이 동 사업이 사업 방식 변경 또 입찰 절차 지연으로 동 공사 착공이 연기되면서 공정이 아주 많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300% 이상 증액을 시키는 건데 착공 일정이 지연된 상황에서 공정률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예산을 한번에 편성하는 것은 뻔한 대규모 불용 또 이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년도 예산에 실질적 집행 가능 범위를 고려하여 공사비, 다 깎자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비 큰 1600억 원 중에 500억 원가량은 감액하여도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 예산 수요를 감안한다고 하고 또 올해 국채를 100조 이상이나 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미세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송기현 위원님.

○송기현 위원 청장님, 이것 올해 다 설계가 마무리된 거잖아요?

○새만금개발청장 김의겸 예, 맞습니다.

○송기현 위원 올해 말부터 착공이 들어가는 거지요?

○새만금개발청장 김의겸 예, 맞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렇지요? 내년 예산으로 책정된 것은, 이게 공고를 3개로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새만금개발청장 김의겸 예, 1·2·3 공고 3개로 합니다.

○송기현 위원 3개로 나눠서 공사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새만금개발청장 김의겸 예, 맞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를 하나로 봐 가지고 1년에 할 수 있겠냐 이렇게 걱정이 될 수는 있는데 실제 공사 방식을 보면 3개 구간으로 나눠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각각 따로따로 해 가지고 따로따로 사업, 건설업체 해 가지고 가는 걸로 해서 내년에 편성된 예산은 집행이 거의 다 가능할 것 같은데 어때요?

○새만금개발청장 김의겸 내년엔 편성된 것 다 집행이 가능하고요. 지금 올해 불용 예산을 지적해 주셨는데……

○송기현 위원 올해 것은 올해 또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집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새만금개발청장 김의겸 예, 맞습니다.

○송기현 위원 거의 대부분 집행되는 것 아니에요?

○새만금개발청장 김의겸 예, 99% 됩니다.

○송기현 위원 그렇지요, 올해 것은?

○새만금개발청장 김의겸 예.

○송기현 위원 이게 늦게 되는 바람에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것뿐이지 지금은 거의 다 돼서 설계비나 이런 게 다 지출이 될 거고, 그래서 올해 말부터는 공사가 실제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예산이라서 그것이 불용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적은 거지요, 굉장히. 그렇지요?

○새만금개발청장 김의겸 예, 없습니다.

○송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최형두 위원 잠깐……

○소위원장 한병도 아니요, 아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도 이견이 있으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올해 집행률도 전부 착수금을 먼저 많이 준 거기 때문에 실제 집행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했으니까요.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아, 끝났나요?

더 이상……

○새만금개발청장 김의겸 아니요, 죄송하지만 제가 착오가 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예산 증액하는 게 동의인데 일부 동의입니다. 부분 동의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아까 1번 면허료 및 수수료에 대해서 5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을 하셨는데 아마 그것을 조금 바꾸시려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5억이 아니에요?

○새만금개발청장 김의겸 예, 거기서 일부만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 액수가 얼마인데요?

○새만금개발청장 김의겸 지금 1.13억 원이 증액이 되는데요, 그 부분이면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1억 1000? 그러면 1억 1000만 증액해 드리면 돼요?

○새만금개발청장 김의겸 1억 1300만 원.

○소위원장 한병도 1억 1300?

○새만금개발청장 김의겸 예.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1억 13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장 김의겸 예, 수정해서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회의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위 자료 10권인데요. 행정안전부 소관 심사를 할 차례인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특별한 게 없어 가지고요, 그냥 인사만 하고 가서야 돼서 먼저 보내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먼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안녕하세요.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박진 사무처장입니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기획지원과장 임재진 기획지원과장 임재진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건이 없잖아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예,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오늘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으시지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감사드리고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래요, 그래요.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행안부차관 김민재입니다.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정영준 행안부 기조실장 정영준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들 오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들, 저희가 안전관리본부장이 또 있는데요. 지금 신안 해역 죽도 여객선 좌초 사고 대응으로 지금 서울의 상황실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오고 있어서 한 16분 17분 정도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괜찮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업무에 먼저 충실하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소위 자료 10권 3페이지 행정안전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6건, 감·중액 사업 4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전자문서소통시스템(정보화)입니다.

내역사업인 AI 행정업무 적용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내역사업 예산 중 일부가 민간 SaaS 구독료 지급을 위해 편성되었는데 이는 AI 행정혁신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다른 공공용 민간 SaaS 활용 촉진 사업과 차이점이 불분명하므로 민간 SaaS 구독료 관련 예산 141억 1300만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원안 유지를 희망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 유지……

○조정훈 위원 아니요, 아닙니다.

조정훈입니다.

전자문서소통시스템인데요. 여기 내역사업에 또 들어가니까 AI 행정업무 적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로 145억 증액을 했고,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보면 공공부문 AI서비스 지원 그래서 지금 200억이 또 들어와 있고 계속 계속해서 AI, AI 행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들고 있는 게 지금 기재부에서 준 AI 사업 리스트인데요. 721개입니다, 721개. 이 중에 정말 어마어마한 중복과 분절이 있거든요.

저는 전자문서소통시스템(정보화)은 동의하지만 이 AI 행정업무 적용은 여기나 9번 공공업무 AI서비스 지원이나 하나로 합치고 또 적절한 금액으로 낮추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감액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지금 전자문서소통시스템의 대상 그다음에 이따 다시 또 논의를 하겠지만 공공부문 AI서비스 지원의 대상, 그게 지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소통시스템에 있는 AI 행정업무는 뭐냐 하면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챗GPT를 공무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챗GPT를 활용하려면 스마트폰이나 외부망을 통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공공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개별 시도나 개별 부처가 하게 되면 중복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관 위원 예, 그 정도 됐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래서 모든 공공부문 중앙부처나 공무원들이 업무 전반에 대해서 AI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삼성SDS와 협약을 해서 민간의 최신기술을 공무원들이 업무에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공통인 거고.

뒤에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아이돌봄이라든지 특화된, 부처별로 돼 있는 것을 AI에 적용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구축을 이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관 위원 만약에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각 부처·기관별로 이 사업을 개별적으로 하겠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는 것이 각 기관·부처에서 하는 중복을 예방하는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고 통합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렇게 시범실시를 해 보면서 효과가 있고 그러면 지방은 지방대로 아니면 중앙·지방 매칭해서 아마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각 부처·기관별로 개별적으로 했을 때의 어떤 그

런 낭비적인 요소를 미리 막기 위해서 하는 부분임을 감안해서 이것은 정부 원안으로 결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가 이것을 하니까 지금 개인정보위원회부터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농림축산부에 있는 각 부처의 AI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조건으로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4페이지입니다.

2번 이북5도 기본경비입니다.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을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칸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북5도위원회의 명예시장·군수 및 읍·면·동장은 실질적인 행정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19억 6100만 원 중 일부인 8억 6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감액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이북5도위원회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그리고 영토조항 여러 가지 것을 포함하고 또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아직까지도 살아 계시고 활동하고 계신 소위 실향민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한 명이 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북5도청이 갖고 있는 기능을, 이재명 정부의 남북정책은 이해합니다만 그것하고 이 명예시장·군수의 기능과 활동을 줄이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계시고 그분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이북5도에 대한 자존심 그리고 활동을 하는 활동비인데요. 큰 액수도 아니고 이것은 감액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한병도**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 조정훈 위원님 하신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북5도위원회가 49년도에 개칭한 이래 국가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하더라도 70년 이상 큰 틀의 개혁 없이 변화하는 남북관계나 실향민의 고령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과도한 도지사 처우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이게 도지사가 5명이거든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보수가 보면 차관급 정무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봉이 1억 5000입니다. 그리고 명예시장·군수가 전체 97명인데요.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명예읍·면·동장이 911명입니다. 이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실질적인 행정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한 행사나 회의 참석 그리고 연락·조정 이런 것 중심으로 기능이 진행되고 있는데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현행보다, 제가 급여를 깎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에 대한 급여를 깎겠다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급여를 깎을 수가 없어요. 제가 살펴보니깐 이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기능의 수준을 감당한다면 지금 집행하고 있는 수당을 현행보다 명예시장과 군수는 25% 정도 그리고 명예읍·면·동장은 50% 정도씩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감액안을 제출한 겁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행안부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용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임미애 위원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논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것은 받아들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보수를 손대는 것 아닙니다. 활동비를 손대는 겁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조정훈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보류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것도 이견 있으니까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 아래 두 번째 칸입니다.

이북5도위원회의 발전적 개편을 위해 행정자문위원회의 회의수당 4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다섯 번 하는데 한 두 번만 감액해서 2회만, 3회 정도로 일부 수용 의견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일부 수용이면 액수가 얼마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1700만 원 감액입니다, 4400만 원 감액이 아니고.

○소위원장 한병도 아, 4000이 아니고 1700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러면 회의를 한 번도 할 수 없기 때문예요.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아까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북5도위원회가 수십 년 됐고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든 게, 이북5도위원회의 발전적 개편을 위해서 만든 게 행정자문위원회입니다. 여기서 안을 만들어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 회의를 못 하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빨리해서 안을 갖고 와야 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것도 하잖아요. 줄이는 거지.

○조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줄이시려고 하니까.

○소위원장 한병도 줄이는 거.

○노종면 위원 질문 겹쳐서.

○소위원장 한병도 예.

○**노종면 위원** 연결돼 있는 거네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좀 알아야겠습니다.

명예시장·군수, 읍·면·동장이 받는 수당이며 급여며 회의참가비가 일반 장들이 받는 것과 동일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닙니다. 명예시장·군수는 월 37만 원 그다음에 읍·면·동장은 14만 원 받고 있고요.

○**노종면 위원** 아니, 일선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일하시는 분들하고 비교할 때.

○**김기웅 위원** 일반적인 동, 구, 서울시의 이런 분들하고.

○**김대식 위원** 도지사.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도지사요? 도지사는……

○**노종면 위원** 아니, 도지사는 도지사끼리 시장은 시장끼리 면장은 면장끼리 비교했을 때 급여나 수당이나 회의참가비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니지요. 전혀 다릅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데 도지사가 1억 5000이예요, 급여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도지사는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정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급 급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도지사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런데 읍·면·동장, 시장·군수는 명예직이라서 사무실이나, 행정구역이 저쪽이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 수당 차이도 있어요? 명예시장이 아닌 일선 시장하고 여기 시장하고 수당 차이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럼요. 시장·군수님들은 3급, 2급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지사 빼고는 다 명예직이라 수당만 받는 거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지사는 차관급 정무직 지사고요. 나머지 읍·면·동장 시장·군수는 명예직입니다.

○**이재관 위원** 보수가 없고 수당만 받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수당만.

○**강승규 위원** 저는 노종면 위원의 질의를 이렇게 받아들였는데요. 시장·군수, 읍·면·동에 명예시장, 명예군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수당을 받느냐 그러면 지금……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 이것도 지금 회의수당 관련된 토론 중이니까요. 회의수당 관련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어서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인건비(이북)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의 셋째 줄입니다. 이북5도위원회 인건비 중 차관급 도지사 5명을 명예직으로 전환하고 관련 인건비 합계 7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 부분은 법령이 먼저 개정이 되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6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관리 사업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민간클
라우드 전환 사업에 대해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는 통폐합 대상인 4등급 정보 시스템이
어서 별도 유지가 불필요하므로 유지관리비 등 82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유지관리비 4400만 원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수용 의견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얼마 감액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3800 감액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3800 감액요.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800만 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5번 사업과 다음 페이지 6번 사업 그리고 11페이지 10번
사업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번 행정안전부 정보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부내 전산관리·SW 관리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AI 대전환에 따라 AI가 학습·인지하기 어
려운 폐쇄형 포맷인 HWP를 줄이고 오픈형 포맷으로 전환하고 있는바, MS 라이선스 내
독스(Docs)로 대체 가능한 한컴오피스 연간 라이선스 구입비용 3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
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6번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운영(정보화)의 내내역사업인 스마트
워크센터 인프라 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272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 있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입니다.

10번 전자기록 관리체계 구축(정보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기록물관리 정보시스템 구
축·운영 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194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 부분은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이게 이번 국감에서 제기됐던 문제인데 AI가 아래한글 문서들을 인식을 못 하는 결과들이 나와서, 국제적으로 소위 폐쇄형 포맷을 쓰지 않고 오픈형 포맷으로 워드라든지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식의 프로그램 또는 구글 독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약간 애국심의 발로로 아래한글 특정 회사 것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공 데이터도 공유하고 또 아까 얘기한 정부 내에 자체 챗GPT 같은 프로세스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 아래한글에서 작성한 문서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 문제가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아래한글 다 안 쓰기 어렵다고 하면 저는 이 의견 자체는 문제 제기를 하고 철회하고 부대의견으로 행안부가 이런 공공 데이터의 기계 판독성 확보라든지 특정 소프트웨어 종속성 해소를 위해서 개방형 문서 포맷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철회하시고 원안 유지하고 특정 소프트웨어 종속성 해제에 대한 이걸 부대의견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없으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8페이지입니다.

7번 행복한 선진시민사회 구현입니다.

내역사업인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사업에 대해 한국자유총연맹은 회원 수가 약 320만 명에 달하는 단체로 지원·육성의 대상이라 보기 어렵고 정관 내 정치적 중립 조항 삭제 및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감안해서 상임위에서 8100만 원 감액 의견을 그리고 1억 61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용에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상임위안 예결위안, 뭘 수용하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상임위도 동의를 했고요 예결위 의견도 수용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뭘 해도 상관없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전액 삭감도 동의하겠다는 건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전액 삭감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둘 중 뭘로 결정하셔도 따르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2개 중에.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니까 상임위안을 할지 예결위안을 할지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전액 삭감으로 하십시오.

○**조정훈 위원** 아니요, 저는 이것은 상임위 삭감안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이 삭감 이유를 보니까 회원 수가 그만큼이 됐는데 지원·육성의 대상이라 보기 어렵고 정치적 조항 삭제 및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로 특검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게 정벌적 예산 삭감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는 한국자유총연맹은 그 기관이 우리 헌법에서 인정되고 법률에 있는 기관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서 해 오던 예산을 이렇게 갑자기 전액 삭감하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 삭감액인 8100만 원의 삭감이 적절한 수준이라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8100만 원 그다음에……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 단체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명백하게 내부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사항이 사실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고요. 그리고 국정감사에도 이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래서 특검이 예상되고 있다면 그에 따르는 조치는 반드시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의결한 대로 전액 삭감에 동의합니다.

○**김대식 위원** (손을 들)

○**소위원장 한병도** 잠시만요, 위원님.

지금 8100만 원과 1억 6100만 원 두 감액 의견이 있는데 이걸 결정을 하고 갈지, 일단 김대식 위원님까지만 말씀 들어 보고……

○**김대식 위원** 제가 이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좀 아는데요, 이곳은 항상 집권하게 되면 집권 대통령의 뜻을 많이 따릅니다, 솔직히. 제가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해 봤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상임위 의견을 제가 존중을 하는데 상임위에서 이 정도로 결정했다고 하면 상임위 의견을 따라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 우리 정부는 따르는 걸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임미애 위원** 이걸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됩니다.

○**김대식 위원** 아니, 정치적인 중립이에요.

○**임미애 위원** 중립인데 한 번도 중립이었던 적이 없어.

○**김대식 위원** 정치적인 중립인데 간혹 한 번씩 정부의 의견을 대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중립이에요, 중립.

○**소위원장 한병도** 이걸 제가 여기서 짧게 간사님들과 해서 결론을 낼까도 생각을 했는데 간사님들과 의견을 해서 일단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9페이지의 8번 이북도민 관련단체 및 행사 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국외 이북도민 고국방문단 초청행사에 대해 불필요한 국외출장여비 절감 차원에서 국외 이북도민 고국방문단 초청행사비 2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감액 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공부문 AI서비스 지원(정보화), 신규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AI서비스 도입 사업들과 차별성·연계성이 모호하고 핵심 사업 내용인 부처·지자체 공통 AI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206억 8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정부 원안 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응용 서비스 보류……

○소위원장 한병도 이것 다 보류하기로 한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1페이지의 10번 사업은 아까 논의했으므로 지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행정안전부 마지막 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출에 감·증액 사업이 1건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지자체 고유사무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비용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미미한 측면이 있고 대규모 현금성 지원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임위에서 85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1조 15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이것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을 한 겁니까, 감액을?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의결은 한 거고, 민주당이……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원안하고 그다음에 감액 이렇게 두 가지……

○**조정훈 위원** 의결을 두 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한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드물긴 한데 상임위에서 도저히 의견 합치가 되지 않아 그렇게 해 온 선례가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그 2개의 의결이 상충될 경우 뭐가 구속력이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것은 앞으로 향후 심사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조정훈 위원** 아니, 그러면 상임위의 의지가 뭔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소위원장 한병도** 이걸 주장만 들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행안위에서 8500억 원, 1조 1500억 원—작은 돈 아니지요—중에서 8500억 원, 거의 한 80%의 예산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상임위 위원장님은 여당 위원장님이시고요. 여당에서도 스스로 이 사업의 효용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야가 나뉘어져서 의결하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의결을 했으면 정족수가 되니까 의결이 된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 만으로는 의결이 안 돼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2개 안을 같이 의결한 걸로—제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고요—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소영 위원**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요 끝까지 이 사안은 합의가 안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의결을 하자는 취지로, 이 건은 국민의힘 측의 주장과 민주당 측의 주장을 둘 다 담아서 보내자 이렇게 의결이 됐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했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큰 틀에서 저는……

○**김대식 위원** 이런 게 보류가 돼야 돼. 그렇지요?

○**조정훈 위원** 제가 지금 발언 좀 하겠습니다.

몇 가지인데요, 이게 지금 1조가 넘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마 시작은 코로나 이후에 죽은 경기를 회복시키겠다고 1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투입한 게 2021년이었고요. 그때는 저는 여러 가지 정황상 비상조치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는 실은 코로나 이후였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유럽, 상당히 많은 나라들에서 소위 헬리콥터 머니라 그래서 다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상설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OECD 선진국 중에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아마 이게 임시 수단인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상설 수단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길래 하느냐? 저희마다 사례가 있고 각 의원님들이 만나는 사람들에 따라 좋다 나쁘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이고 데이터를 갖고 분석한다고 믿고 있는 KDI에서조차 소비촉진 효과는 일시적이라고 분명히 결론을 냈고요. 또 고소득층 소비 대체효과가 크다, 돈 많은 사람들에게 소비 대체효과가 컸다는 거고 저소득층 실질

소비 증대 효과는 미비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고 KDI의 분석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발행 비용이 총발행 비용의 10%에 달한다고 하면서 발행량의 확대보다 적정규모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우리가 여야,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이 사업의 효과성을 다각도로 분석해서 합의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정리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분석과 합의 없이 이렇게 1조 원 이상을 계속적으로, 일시 프로그램인 것을 상시화시키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한병도 아니, 지금 여러 분 해서요 노종면 위원님 먼저 드셨으니까 세 분 중에 대표로 노종면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 책자에 적혀 있는 2023년과 2024년에 교부된 국비 일부가 미집행됐다, 그 이유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국비를 깎아서 겨우 국회에서 찢끔찢끔 되살려 놓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할인율을 대폭 낮춥니다. 할인율이 떨어지면 메리트가 없으니까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돌아가는 그런 게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확보하면서 다 두 자릿수 이상이 되게끔 정부에서 다 조율을 해 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장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당연히 평가는 냉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평가들 표본 자체가, 평가 대상 자체가 고르지 않아요. 시행을 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완전히 그냥 죽이기로 평가할 만큼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일관된 흐름 속에서 정책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그 부분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이번 대선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국민께서 하라고 이재명 정부를 선택한 겁니다. 그것을 시행을 해서 일정한 효과를 거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순간에 이것을 깎아야 된다? 이것은 대선에서 드러난 국민 민심에 역행하는 거지요. 이 정도로만 의견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 의견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므로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행안부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끝났나요?

행안부 소관 감액 심사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최동석입니다.

○인사혁신처기획조정관 김성훈 기획조정관 김성훈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들 오세요.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64페이지 인사혁신처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증액사업이 1건 있습니다.

기타경상이전수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예산안에 과소 반영된 기관장 임차보증금 반납액 4억 7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우리 처는 증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일반회계 세출에 감액사업 1건, 감·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먼저 1번 인사관리국입니다.

내역사업인 인사관리제도 연구용역에 대해 연구과제의 구체적 수행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은 채 관련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기존 정책연구개발 세부사업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고 예산 45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감액 의견을 주셨고 우리 처는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처장님, 이 용역이 정책연구비에 반영돼 있는데 그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이게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기 때문이에요 정책연구비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연구비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지금 인사관리제도 연구용역하고 정책연구비의 인사관리 연구용역이 사실은 워딩이 거의 비슷해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워딩은 비슷합니다만……

○이재관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중복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이것은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관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워딩을 좀 달리해서 하나는 실태조사, 하나는 정책연구비 그렇게 분명히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동의합니다.

○**이재관 위원** 그런 조건으로 이 부분은 철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66페이지 인사혁신처 마지막 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 운영(ODA)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외교부 등 정부의 국제분담금 총액이 연간 2조 원 이상에 달함에도 별도의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고 직위를 확보하는 것은 정책 적합성과 재정 효율성이 낮으므로 총액의 50%인 221억 1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93억 1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감액 의견을 주셨고 상임위에서는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우리 처는 최소한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간 낮은 인건비 단가와 고환율로 인해서 미납금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예산 부족분의 절반을 우선 반영하여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직위의 안정적 유지를 통한 국익 반영을 위해서 정부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혁신처장님, 처음 뵙는데요. 저는 이 제도는 본질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제기구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하고 왔는데요, 공무원들 나가서 쉬다 오는 제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대부분은 각 국가가 낸 분담금에 따라서 그 나라 국적의 직원을 고용을 해야 될 의무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 의무 티오를요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이 다 찾아갑니다. 일본을 비롯해서 다른 OECD 국가들은 젊은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는 쪽으로 쓰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 티오를 다 채워 갑니까?

기재부에서 지금 24명 나가 있어요. 지금 과기부 10명, 산업부 9명, 환경부 8명, 국토부 8명, 해수부 7명, 복지부 7명, 인사혁신처 5명, 이게 국제기구에서 한국 직원 티오에 다 포함되는 티오들이예요. 젊은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국제 경험을 하면서 국제기구에 들어가고 싶어도 공무원들한테 다 밀려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요? 환율이 낮아서 인건비 단가…… 생활이 어렵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것 한번 짚으려고 단단히 버르고 있는데요. 처장님, 이 현실을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 이 예산은 정말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돈 갖고 가니까 국제기구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사람 공짜로 쓰고 돈은 한국 정부에서 내주니까 그냥 쓰는 겁니다, 효율이 떨어져도.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이것은 아주아주…… 한두 명이면 모를까 정말 이렇게 수십 명, 매년 수백억씩 수천억씩 쓰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분노할 거라고 봐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유학도 보내 드리잖아요, 공무원들. 유학 갔다 와서 아이들 대학 보낼 즈음해서, 중학교·고등학교 즈음해서 이것 나가는 거라고요, 아이들 유학 보내려고. 저는 이것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제기구에 대해서 봤을 때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는 분담금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혼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제기구에 대한 일종의 책무, 의무 부담입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GNP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또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은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 일반에 개방을 해서 경쟁의 구도를 통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공무원이 채용이 됐을 때는 그 부분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분담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부담금에 대한 부분과 혼용이 되다 보면 분담금의 영역을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침범하는 것으로 혼동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유엔기구에서의 분담금에 비해서 국제기구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의 비중이 사실은 상당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지금 취약한 수준 아닙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 케이스가 부각되다 보니까 우리가 국제기구에 공무원들이 과도하게 많은 부분들에 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또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내용은 정부 원안으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 운영 관련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인사혁신처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혁신처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 마치겠습니다.

혁신처 관계관계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경찰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계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입니다.

○경찰청기획조정관 손제한 경찰청 기획관리관 손제한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들 오세요.

수석전문위원 보고 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72페이지 경찰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2건, 감·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먼저 1번 중앙학교 인건비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신입경찰관 교육이 3월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1·2월 교육생에 대한 봉급 27억 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대식 위원 동의는 하는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1·2월 달 교육생 800명에 대한 것을 감액, 이것은 동의를 하는데 왜 이렇게 잡아요? 이거 과다계상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잡아요? 그동안에 그렇게 잡아 왔다는 거 아니에요, 뻔히 알고 있으면서.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실수로 잘못 잡았습니다.

○김대식 위원 실수로?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소위원장 한병도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73페이지 2번 수사인권 보호활동입니다.

내역사업인 진술영상녹화실 운영 사업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진술영상녹화 실시율이 5% 내외로 저조함에도 진술영상녹화실 신설 및 증설 예산이 반영되어 불필요한 예산 투입 우려가 있으므로 상임위는 6100만 원 감액 의견을 그리고 1억 6775만 원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상임위원회 감액안대로 의결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저는 진술영상녹화 실시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진술영상녹화는 법적으로 본인이 동의를 안 하면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이 영상녹화를 하면 그것을 CD로 다시 구워 가지고 또 송치를 해야 되는 그런 좀 번거로운 절차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재관 위원 그러면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하는 그 전제도 문제가 좀 있는 것인데요.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경찰청의 노력만으로 그렇게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런 구조라고 하면 저는 제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6100만 원 상임위 감액 의견으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74페이지 3번 미래치안 기반 조성입니다.

내역사업인 국민안전산업펀드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경찰청의 기존·신규 사

업과 사업 목적이 중복되고 예산편성 과정 중에 신규 반영되어 절차상 부적절하므로 5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펀드가 인기가 있긴 한가 봅니다. 경찰도 이제 펀드를 운용한다고 하는데 펀드 운용 내용을 봤더니 국민안전산업 분야에 투자하여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청장님이신가요, 차장님이신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차장입니다.

○조정훈 위원 이 국민안전산업펀드의 목표수익률을 몇 퍼센트로 잡고 계세요? 아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수익률이 있으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8%.

○조정훈 위원 8%?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조정훈 위원 왜 8%의 기준입니까? 담당자 답변해 보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담당 국장이……

○조정훈 위원 무슨 기준으로 8%예요?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최근 한 5년간 타 정책펀드의 산업을 저희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조정훈 위원 다른 부처 정책펀드의 기준이라고요?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국민안전산업, 치안과 재난 산업에 대한 이해 이런 것에 대해서 실은 경찰청이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굳이 한다면 행안부나 과기부나 또는 이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성이 누적된 부처에 치안과 재난 분야에 좀 투자해 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경찰청에서 8% 펀드 수익률을 만들기 위해서 펀드를 운용한다? 이게 경찰청의 본연의 업무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못 느끼시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제가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한병도 예.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저희 한국 치안이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외국의 경찰들이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시켜 주길 원하고 있고 또 치안 ODA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에 치안 ODA를 하면서 치안과 관련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주는데 그게 다 주로 외국산 제품으로 해 주다 보니까 국내의 치안산업이 지금 육성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훈 위원 차장님, 저 이해합니다. 치안 ODA는 적극 지지하고요. 한국의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 해외에 수출하는 것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해외 장비를 국산화하는 것도 동의하고요.

다만 해외 장비를 국산화할 책임이 경찰청에 있지는 않다고요. 산업부에 있든지 중기

부에 있는지 펀드를 운용하는 부처에 있지, 경찰청에서 민간과 펀드를 만들어서 이것을 또 투자를 해 가지고 8% 수익률을 낸다고 지금 약속하셨으니까 8% 수익률을 내려고 또 얼마나 고르시겠습니까? 경찰청 내에 펀드매니저 있어요? 펀드에 대해서 깊이 실행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기재부에서 좀 조정을 해 주세요. 제가 치안·안전 산업을 방치하자는 뜻이 아니고 어떻게 경찰청에서 펀드를 운용하게 합니까?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종면 위원 간단하게 10초만.

○소위원장 한병도 예.

○노종면 위원 펀드 처음이에요?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이게 예산 요구하는 절차를 어긴 게 어떤 것을 어긴 것이지요?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저희가 5월 말까지 해서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월 말까지 저희가 받은 지출한도 범위 내의 예산이고, 물론 아주 원칙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통상의 경우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조금 지연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 펀드는 7월 말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관 위원 한도 내에서 7월 말까지 제출했다는 말씀이지요?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관 위원 임기근 차관님, 이게 재정법의 위반이라고 봐야 되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재정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같이 역동적인 나라가 세계에 없습니다. 그런데 5월 30일 날 요구된 그 예산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저희가 9월 2일까지 제출하는데요, 3개월 동안에 추가로 이렇게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예산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입니다.

죄송하지만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한병도 예.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이 펀드 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하고 행안부하고 50억씩 내서, 중기부에 공공기관인 한국벤처투자라고 있습니다. 거기……

○조정훈 위원 그래요, 모든 펀드가 다 그래요. 저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새롭게 할 정도로 펀드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한병도 잘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미래치안 기반조성 사업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은 92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찰청 마지막 심사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이 2건 있습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지원 사업 중 총포·화약 안전관리 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일반용역비로 편성된 기술료·제경비 등 전산개발 예산 6억 1100만 원은 연구개발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반연구비로 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2번입니다. 일반회계의 아산 경찰병원 건립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1년 차 사업에 필요한 조사·측량을 위해 실시설계비 7억 6500만 원을 기본조사설계비로 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경찰청과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경찰청 의견 듣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2건 모두 비목 변경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기재부 의견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사업의 실질에 맞도록 비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비목 변경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비목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 마치겠습니다.

경찰청은 회의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소방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안녕하십니까?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옆에 기조실장님이신가요?

○소방청기획조정관 이진호 예, 기획조정관 이진호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들 오세요.

수석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93페이지 소방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미래인프라 화재위험 대응을 위한 소방기술 개발(R&D) 신규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과 기존 연구개발사업인 전기기반 모빌리티 관련 시설 및 부품 화재대응 기술개발 사업과 주목적이 동일하여 중복성이 높고 기존 연구개발 사업의 결과에 따라 향후에 보완적인 사업을 추가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신규 예산 13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미래인프라 화재위험 대응을 위한 소방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 우리 기관은 감액보다는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사업은 승용 전기차의 화재대응기술 개발이고 신규 사업은 배터리와 수소 기반의 미래형 인프라 시설에 대한 화재대응기술로 중복성이라기보다는 차별성이 좀 있습니다. 동일 사업에 대한 증액 의견도 주셨기에 당초 정부 원안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소방청은 늘 고생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가 좀 도와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고맙습니다.

○김대식 위원 참 고생 많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청장님, 2024년에서 27년 동안에 240억 원 규모의 전기기반 모빌리티 관련해서 지금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지요?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게 지금 중간점검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지금 성과 결과물은 없고요.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김대식 위원 이게 2024년, 지금 2025년 말 정도 됐는데 어느 정도 중간보고 이런 건 안 받습니까?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실증테스트 기간 전이고요. 성과물이 나와서 테스트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현장의 적응성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게 6개 분야 몇 개 과제지요, 지금?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5개 과제입니다.

○김대식 위원 5개? 18개 과제 아니에요?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지요?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예.

○김대식 위원 18개 과제가, 이걸 우선 확인하는데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 효율성도 좀 높이고.

또다시 미래인프라 화재위험 대응 소방기술 개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애매 모호해요. 애매모호하고 또 13억 원을 여기에다가, 기존 사업과 목적이 거의 비슷한데 중복된 면이 있다 이거예요.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이 부분은요, 이번에 반영된 사업은 기존 사업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배터리……

○김대식 위원 이차전지 그것 아니에요?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차전지 화재대응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이게 트램버스라든지 대형버스와 같은 미래형 인프라 시설과 관련된 화재대응 기법과 관련된 R&D 사업입니다. 그 이전의 사업은 승용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 기술에 관련된 거고요. 지금 반영된 것은 대형버스라든지 트램버스와 같

은 수소 기반 또 배터리 기반의 미래인프라와 관련된 보장 사업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지금 240억 규모의 대형 R&D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걸 신규 사업으로 하기보다는 거기다가 없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게. 별도로 이렇게 빼내지 말고 지금 기존 R&D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조계원 위원** 그런데 중복이 안 되잖아요.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이게 지금 굉장히 차별성 있는 사업입니다, 2개 사업이요. 중복되지 않고요.

○**소위원장 한병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저는 그렇게 차별성이 없다고 봐요, 이게.

○**조계원 위원** 수소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김대식 위원** 아니아니, 지금 이차전지 화재진압 기술 연변이라니까요.

○**이재관 위원** 청장님, 산불 진화하고 건물 진화하고 진화 방법이 같습니까?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다릅니다.

○**이재관 위원** 지금 현재 그동안 연구하셨던 것은 전기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 화재 예방 기술이지 않습니까?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그렇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트램이라든지 대형 수소·전기차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미래인프라 사업……

○**이재관 위원** 미래인프라, 그런 것에 대비해서 미리 화재예방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기술 아닌가요?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재관 위원** 새로운 영역이지 않습니까?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새로운 영역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게 하면 토론이 되는데, 새로운 영역이라고 지금……

○**김한규 위원** 질문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마저 하시지요.

○**이재관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은 원안이 유지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김대식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이재관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제 주장도 일리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좀 달아서 보류해 놓고 또 심사를 한번 하시지요.

○**조계원 위원**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통과시켜 주든지 아니면 보류하시든지.

○**김한규 위원** 부대의견으로 통과해요?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한번 그것은 간사들끼리 좀 의논하세요.

○**소위원장 한병도** 그래도 지금 한번 잠깐 검토를 해 주시면.

○**김대식 위원** 저는 13억 원은 우선 삭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한병도** 이 건은 한 분씩만 더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임미애 위원님 듣고 강승규 위원님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오히려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이게 5년 차 사업이에요. 5년 동안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올 초에 이런 경험이 있었지 않습

니까? 국정자원 화재도 그렇고 이것 배터리로 인한 화재였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새로운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거여서 저는 이걸 5년까지 끌 것이 아니라 좀 빠르게 처리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식 위원** 내 주장은 신규라고 하지 말고 앞서서 같이 R&D로 토털로 가는 게 맞다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한병도** 강승규 위원님.

○**임미애 위원** 증액을 해야지, 그러면.

○**소위원장 한병도** 강승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승규 위원** 이게 기존에 소방청이 해 오고 있던 전기자동차나 여러 가지 모빌리티 관련 배터리의 화재 진화 관련 연구와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기존 연구사업과?

○**소위원장 한병도** 다시 말씀해 주세요.

○**강승규 위원** 얘기해 보세요. 제가 밖에 잠깐 나갔다 오느라고……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트램하고 전기버스에 대한 화재대응 기법이라든지……

○**강승규 위원** 어떤 거예요? 전기버스?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예, 그런 건 없고요,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연구한 것은 전기버스는 해당이 안 돼요?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예.

○**강승규 위원** 전기버스는 또 달라요?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배터리도 좀 다르고요.

○**강승규 위원** 아니, 배터리 화재가 전기버스하고 승용차 화재하고 달라요?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용량도 다르고요 설치 위치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화재 진압 방법도 다르고요.

○**강승규 위원** 그래서 장비가 달라져요?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예, 달라집니다.

○**강승규 위원** 연구가 그게……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그리고 그것뿐 아니고요 차고지의 시설에 대한 소방설비 그다음에 대응기법 이런 부분에 대한 R&D 사업입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전기자동차 화재에 관련된 연구가 지금 유지되어 오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얘기 들은 게 전기버스, 조금 규모가 크다, 차고지다, 이것 하나도 새로운 게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뭐가 새롭다는 거지요?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수소 기반의 미래 인프라 시설에 관련된 화재대응은 이게 처음이고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위원님.

○**강승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기 배터리나 이런 것이 아닌 수소 기반이에요? 분명해요?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수소 기반도 있고 배터리 기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제가 지금 늦게 여기 왔다 와서 이걸 아무리 읽어 봐도, 줄 치면서 읽어 봐도 차이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무슨 차이인지.

○**소위원장 한병도** 잠시만요.

소방청, 그러면 한 7억 반 정도 해서 해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13억이 아니고?

○강승규 위원 이것 보류하고……

○이소영 위원 그냥 이런 것은 해 주세요, 이것은 국민안전을 위한 건데. 화재 나서 또……

○소위원장 한병도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야당도 의견을 확인하는 게……

○강승규 위원 아니, 해 준다 하더라도 이 연구가 기존의 연구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타깃이 다른지 이해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소영 위원 아까 다 설명했는데,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이재관 위원 타깃이 달라.

○강승규 위원 타깃이, 지금 내가 볼 때 여기에서 분석해 놓은 걸 아무리 찾아봐도 타깃을 못 찾겠다니까.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정리해 주시지요.

○이재관 위원 얘기하잖아요.

○강승규 위원 아니, 다르다니까, 구조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의견 듣고 소방청에서 원안 유지를 계속 주장하면 이걸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쪽에서 한 7억 정도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소방청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미래 재난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가 절실하고요. 사실은 수소 기반, 배터리 기반의 이런 인프라 시설에 대한 화재대응 기법이 절박합니다. 사실 5년도 너무 깁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간곡하게 반영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알겠습니다.

조계원 위원님 짧게 듣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지금 설명을 함에 있어서 계속 배터리가 포함되고 수소 이렇게만 얘기하니깐 이게 연구영역이 중복되어 보이잖아요.

여기 구체적인 과제 6개를 보면 도심형 철도 및 전기버스 화재 진압,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 기술, 대규모 지하 복합환승 인프라 화재 안전, 대용량 수소 인프라 사고, 스마트 물류시설 화재 예측 및 진압, BIPV 연계·분산형 ESS 화재 위험성, 전혀 중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 사업하고.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왜 계속 배터리하고 수소만 반복하세요.

○조정훈 위원 청장님, 이걸 보류하면 전액 다 삭감될 수도 있고 전액 다 사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 당은 아직도 중복성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7억 정도……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 위원장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소영 위원 아니요.

○조정훈 위원 동의하신다잖아요.

○이소영 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노종면 위원 안전 관련된 부분을 그렇게 정부를 압박하면 안 되지요.

○강승규 위원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정리하겠습니다.

미래 인프라 화재위험 대응을 위한 소방기술 개발 사업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소방청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소방청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청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강동완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 옥미선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옥미선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들 오세요.

수석전문위원 보고 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08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감액사업이 2건 있습니다.

먼저 1번 위법행위 예방활동입니다.

내역사업인 정치자금 조사에 대해 현재 지방의회 후원회 등록률이 14.6%에 불과하고 12개월 동안 행정보조요원을 두겠다는 것은 과다편성이므로 인건비 및 4대보험료 3개월 분 6억 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우리 위원회는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자금 회계실무 안내요원은 작년 7월 1일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회계보고 안내 및 회계보고서 접수·심사 등을 담당하기 위해 이번 정부안에 처음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7일 기준으로 전체 지방의원 3860명 중에 16.4%인 634명이 후원회 등록을 마쳤는데요.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광역의원은 모금액이 1억 원, 기초의원은 6000만 원까지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임박할수록 지방의원 후원회 증가가 예상되는데 지방의원님들은 주로 본인이 회계처리를 직접 하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안내와 접수·심사·조사 지원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의원 후원회는 등록이 되면 임기 만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관할 선관위에서는 지방의원 후원회 관련 정치자금 업무가 연중 상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임 직원이 증원되기 전까지는 회계실무 안내요원이 연중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김기웅 위원** 궁금한 것만 제가, 이제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도가 기초의원이 60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원래 선거가 없는 해는 광역의원 5000만 원, 기초의원 3000만 원인데 선거가 있으면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평소에는 3000만 원, 5000만 원인데 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가 돼서 6000만 원, 1억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돈이 없어서, 회계책임자 뒤 봐야 돈이 더 드니까 본인이 직접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낮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등록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런데 이 정도면 대부분 다 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김대식 위원** 그럴 능력이 없어.

○**김기웅 위원** 아니, 글썄 낮은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가 없다 보니까 광역의원 같은 경우에는 모금액이 5000만 원이고 기초의원이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본인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회계책임자가 하게 되면 인건비로 전부 지출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실익이 없다 보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만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는 지방선거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막바로 후보 등록하기 전까지는 광역의원 5000만 원, 기초의원 3000만 원을 모금하고 또 그 이후에는 추가로 5000만 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으로는 내년의 경우에는 아주 많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신다 이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예상은 그렇게 됩니다.

○**김기웅 위원** 예상될 거다, 처음이니까?

또 하나는 9개월 치를 하려고 했더니, 너무 길지 않냐 했더니 1년 내내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후에도 정산하러 오고. 그렇지요? 그 말씀인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김기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후원회는 연간 두 차례 회계보고를 하게 되고요. 후원회를 둔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는 해는 두 차례, 선거가 없는 해는 한 차례씩 회계보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김기웅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직원을 고용하는 게 아니고 선관위 안내요원, 여기 보시면 ‘어서 오세요’ ‘저리로 가십시오’ 하는 사람을 기간제로 두겠다는 건데 이것이 얼마나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역할이 단순하게 그분들한테 와서만 연락을 받는 게 아니고 사전에 회계보고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 드리고 또 그분들이 문의 전화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옵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 전화를 했을 때 하는 부분 그다음에 정치자금 회계관리프로그램 시스템 운영과 관련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회계프로그램 이렇게 운영하시라고 다 드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면 잘 몰라서 저희들한테 전화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각 선관위에서는 국회의원님들의 후원회만 있다 보니까 그런 후원회에 관련한 안내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당장 많은 곳 같은, 송파 같은 경우는 38명이 지방의원을 하기 때문에……

○소위원장 한병도 잘 알겠습니다.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이 사무의 성격상 사실은 일반 공무원들이 하는 것처럼 민원 처리 기간 일주일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거의 즉시즉시 대응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앞으로의 수요 폭증뿐만 아니라 업무의 특성이라든지 감안을 할 때 이거는 오히려 미리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위원장 한병도 원안 유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관 위원 예, 원안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지방의원의 후원회가 처음 도입된 게 언제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작년 7월 1일 자로 등록이 됐습니다.

○강승규 위원 22년 선거에는 없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없었습니다.

○강승규 위원 22년 선거에서도 지방선거 후보자,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둘 수 있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거는 예비후보자고, 후보자 후원회시고요. 지방의원 현직을 가지신 분들의……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원회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안내자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2년 지방선거에서도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대해서 후원회 제도를 뒀어요. 그때 이렇게 안내요원 늘렸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때는, 22년 같은 경우에는요 지방선거 경비에, 지방선거 회계에 안내요원을 임시적으로 6개월 정도 쓸 수 있게끔 지방선거 관리 경비 예산이 책정돼 있어서……

○강승규 위원 그러면 그때도 그렇게 임시적으로 썼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강승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 선거에 필요할 때 임시로 쓰면 되잖아요. 안내요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런데……

○강승규 위원 잠깐, 제 얘기 한번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22년 선거와 26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대해서 후원회를 두는 데에 대해서 소위 업무 수요가 추가적으로 늘어난 건 아니다, 처음 있는 거 아니다 제가 그걸 먼저 지적하는 거고요.

두 번째, 지방의원에 대해서 후원회를 두는데 올해부터 됐나요, 그게? 작년부터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후원회 제도 이용률이 14.6%인데 10월 통계를 보면 16.4%라는 거지요. 16.4%예요. 지방의원들이 후원회를 두는 게 실제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국회의원 후원회도 그렇게 운영이 잘 안 되는데. 그런데 지방의원들이 이렇게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16.4% 겨우 그 정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고정적인 안내직원까지 추가해서 후원회 업무에 대한 안내가 그렇게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이거 후원회 제도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선관위가 국회의원선거를 가지고 수도 없이 해 오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직원을 늘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인 겁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이 예산은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초의원을 해 봤고 광역의원을 해 봤지만 제일 아쉬웠던 게 후원회를 구성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깎게 되면 사실은 저희들은, 국회의원들은 후원회가 합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 그것에 관한 회계 업무를 할 수 있는 행정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원으로 매달 월급을 주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의원과 광역의원들한테 후원회를 구성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후원회 비용 가지고 ‘네가 직원 채용해서 이거 회계 업무 담당해라’라고 못 합니다. 우리가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지방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라면 저는 이 예산은 진즉에 확보되었어야 하는 예산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원안으로 통과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한병도 조정훈 위원님 말씀 듣고 한 분 더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이걸 좀 수정을 해서 적절히 조정하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강승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지방선거 때도 선거기간 동안 지방의원 출마자들이 후원회를 열 수 있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선거가 아닌 비선거기간에 후원회를 지원할 업무, 추가 소요라는 걸 백번 양보해서 그거예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저는 이걸 1년 치가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 한 600명 정도가 지금 후원회를 열었고 80명 증원하신다고 하면 한 사람당 안전요원이 담당해야 될 의원의 숫자가 7명이나 8명이에요. 선거기간에는 이 사람들이 모두 선거하니까 바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선거 끝나고 회계보고하고 나면, 지방선거 이후에 선거 끝나고 정말 이 7명의 사람들이 몇 명이나 전화받겠어요. 한 사람이 정말 1통이라도 받을지 저는 의문이에요. 그리고 아까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이 안내요원들이 지방의원들의 회계·행정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안내만 해 주는 거지 대신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난 22년에는 선거기간 동안에 지방의원 후원회 보조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국비로는 한 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조정훈 위원 22년에 조금은 있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때도 지방비였습니다.

○조정훈 위원 지방비는 있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조정훈 위원 이번에도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이번에도 지방비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있고 이번에도 있으니…… 지난번에는 했는데 이번에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차이를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정훈 위원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지방비로 운영하는 안내요원들은 선거비용 자료 수집 같은 역할을 하고 회계보고서는 물론 사전검토 같은 것을 합시다마는, 이번 지방선거 때 예비후보자하고 후보자들을 전체 9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22년보다 26년의 후보자 수가 10%, 20% 늘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후보자 수는 지금은 알 수 없지요.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시기가 광역의원 같은 경우는 내년 2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만 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용하는 자원들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예산으로는 2월부터 7월까지밖에 운용을 못 합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해했으니까, 그때가 가장 수요가 많은 거예요. 가장 수요가 많지 않겠습니까? 선거관리에서 회계처리 잘못하면 낙선인데, 의원직 상실인데……

○소위원장 한병도 마무리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그 예산은 제가 알겠는데 지방비가 있으니 이것을 12개월 다 하지 말고 적절히 좀 조율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일단 보류하고 몇 달 치가 적정한지 한번 소소위 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조계원 위원님.

○임미애 위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소위원장 한병도 둘 중의 한 분만 말씀해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지금 후원회 등록률이 아까 16.4%라고 그랬나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등록률이 지금 현재 16.4%라고 하더라도 지역구별로 보면 의원들이 보통 한 지역구당 이미 한 4인 정도 후원회를 개설했다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업무 감당을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내년에는 선거가 있고 더구나 비용이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훨씬 많은 후원회 가입이…… 제가 안 봐도 뻔하거든요. 지방의원들이 관심도 많고 그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지원이, 안내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고. 상식적으로 봐도 이것은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소위원장 한병도 정리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제가 그냥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은 수도권에서 선거를 하시는 분들과

지방에서 선거를 하는 사람들의 처지가 조금 다른데요. 지방에서 선거를 하다 보면 회계 업무를 감당해 낼 수 있는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선관위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선거 회계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후원회를 어떻게 잘, 회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지방의원들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것도 토론을 많이 해 봤는데요 내용에 대해 첨예하게 의견이 갈라서 보류하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중앙선관위 마지막 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109페이지 선거연수원 운영입니다.

내역사업인 청사 CI 제작·교체 7800만 원 신규 사업은 선거연수원 개원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선거연수원의 CI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독자적인 CI 개발 필요성이 낮고 유사 교육기관들의 경우 장기간 CI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78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우리 위원회는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창설된 선거연수원은 내년 창설 30주년을 맞아서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비전을 재설정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선거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발전방향을 내포할 수 있는 새로운 CI 제작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의 우리 선거연수원 CI는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던 2007년 12월에 담당 직원이 고작 77만 원 예산을 들여서 제작한 것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연수원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교육기관들과 달리 소속 직원, 저희 선관위 직원 외에도 연간 50만 명 내외 외부 수요의 일반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선거교육 또 연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선거교육 전문기관의 의미와 상징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CI 변경이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을 꼭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재관 위원님 말씀……

○조계원 위원 결단하십시오.

○김대식 위원 이거는 좀 도와주시지요.

(웃음소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감사합니다.

○김대식 위원 이거는 좀 도와줘도 될 거 같은데.

○이재관 위원 특별하게 어떤, 지금 하신 말씀이 있는데 특별한 어떤 그런 동기가 있었나요, 바뀌야 되겠다라고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전에는요, 저희들이 2007년에 만든 CI는 사실

은 그 당시 민주시민교육원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서 지금 영문도 코리아 시빅 에듀케이션 인스티튜트 포 데모크라시(Korean Civic Education Institute for Democracy)로 되어 있어서 현재의 선거연수원하고 전혀 다른 영문으로 지금 CI 밑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0주년 때 아예 새롭게, 멋있게 바꿔 보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거는 동의합니다.

○**김한규 위원** 삭감해요.

○**조정훈 위원** 그런데 아무도 안 봐요.

○**김한규 위원** 여기 감액해, 감액.

○**이소영 위원** 이런 건 감액해도 될 거 같은데.

○**조정훈 위원** 그거 해 줄 테니까 땀 데 써요.

○**강승규 위원**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 봐요. 내가 도와줄까요?

○**소위원장 한병도** 아니, 잠깐만요.

이재관 위원님.

○**강승규 위원** 내가 이것 전문가예요.

○**조계원 위원** 마지막이니까 빨리, 위원님 의견 듣고 마치시지요.

○**이재관 위원** 아니, 지금 차장님이 나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직원들의 그런 일체감이 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는 것 같은데, 다만 이 기관이 굳이…… 예전에 지방자치단체 보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걸 바꾸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저희들은……

○**이재관 위원** 그런데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겠더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실 현장에 있는 분들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취지를 살려서 한번 잘해 보시고요. 이 내용은 그러면 철회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저……

○**소위원장 한병도** 똑같은 얘기예요?

○**강승규 위원** 아니요, 다른 얘기예요.

○**소위원장 한병도** 예,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이왕 CI, 심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 그런데요. 저는 선관위가 CI를 바꾸겠다고 하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칠십몇만 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 또 기관 명칭이 좀 바뀌었다, 옛 영문명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부분 등은 수정할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선관위가 예를 들면 제가 그냥,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부정선거 시비 등 그런 것들로 인해서 CI, 선관위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해서 국민과의 이미지 개선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그러니까 심벌 마크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CI를 바꿔서, 그러니까 선관위의 어떤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해야 되겠다 하는 분명한 이유가 돼야 되고 그것의 작업으로 심벌 마크라든지 여러 가지 상징 체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왕 CI를 바꾼다고 하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

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연수원 운영 관련해서 원안 유지……

○노종면 위원 의사록에 남겨야 되니까요.

○소위원장 한병도 예, 노종면 위원님.

○노종면 위원 만약에 선관위에서 부정선거 인식 이런 거를 고려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반대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강승규 김기웅 김대식 김한규 노종면 박민규 송기현 이소영 이재관 임미애
조계원 조정훈 최형두 한병도

○청가 위원(1인)

박형수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전문위원 정대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 조용범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제2차관 김대현

기획조정실장 김정훈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김재현

문화정책관 이정미

예술정책관 이용신
산업통상부
차관 문신학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기획조정실장 오승철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기획조정실장 손필훈
국토교통부
제2차관 강희업
재정담당관 이주열
인사혁신처
처장 최동석
기획조정관 김성훈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기획조정관 손제한
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소방청
청장직무대행 김승룡
기획조정관 이진호
국가유산청
청장 허민
기획조정관 황권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강주엽
기획조정관 박상옥
새만금개발청
청장 김의겸
기획조정관 정인권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 박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강동완
기획조정실장 옥미선